2025
03
Vol.345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자유무역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
허 정

현안분석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
박정흠

정책토론리포트
제63회 공공정책포럼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OECD 글로벌 조세협정 거부 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3월 17일 발행
통권 제34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2 **E-mail**: pub@kipf.re.kr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행 인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 집 위 원	권성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 집 간 사	조혜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편 집 · 제 작	길민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자유무역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

허 정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안분석

10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책토론리포트

36 제6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42 미국-OECD 글로벌 조세협정 거부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유무역체제의 종말과 한국의 새로운 통상전략

허 정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들어가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다소 진부하게 들리긴 하지만 이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수출"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경제전문 용어가 아니고 하나의 가치가 된 듯하다. 산업화 시대에 수출 주도 경제성장의 기적을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하였고, 현재 경제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소국개방형 거시경제구조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수출의 성과는 여전히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지난 10년간 두 가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종말과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등장이다. 한마디로, 무역 전쟁 중이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 종말

자유무역체제에 되돌리기 힘든 균열이 발생한 것은 2015~2016년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대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WTO 폐기를 공언하였고,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탈퇴했다.

TPP는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으로 이름이 바뀌고 11개국이 참여하는 기술과 지적재산권 규범을 강화시킨 첨단산업 지향형 자유무역협정으로 남아있다

세계 제1 경제대국인 미국이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자유무역체제 폐기와 탈퇴를 선언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1년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여 시장경제로 편입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이라는 초거대시장이 열리면서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중국에 투자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기업들에게 탈취 혹은 불합리하게 이전되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동시에 대중 무역적자 누적 및 일자리 감소를 오랫동안 경험한 바 있다. 특히 후자의 현상을 국제경제학계에서는 '차이나 신드롬(China Syndrome)'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010년대 내내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 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한 실증연구들이 학술지에 보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통상 환경하에, 2015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WTO에 의한 국제통상규범만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행정부 직속 기관인 USTR의 대표가 WTO 폐기를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TPP였다. 하지만,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TPP마저 탈퇴했던 것이다. TPP는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이름이 바뀌고 11개국이 참여하는 기술과 지적재산권 규범을 강화시킨 첨단산업 지향형 자유무역협정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분쟁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각국이 차별적인 산업보호정책을 취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2016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세계통상질서의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었고,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자원, 기술, 노동, 산업을 보호해 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2025년 2기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밀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 증대를 위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고율의 수입관세와 해외영업 기업 과세로 보완하려고 하지만 부족할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에서는 연준의 의지보다 빠른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은 그러한 압력에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상태이다. 셋째, 산업 측면에서는 화석에너지 생산 증대와 친환경산업 축소 방향으로 진행된다. 화석에너지 공급은 미국내 인플레이션을 누르려는 목적이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의 보조금 축소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겠지만 시장잠재력을 고려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상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주요 수입품목에 부과하는 고율의 보편관세와 수출국가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미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관세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강력한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관세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고관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는 다양한 관세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최악의 경우 큰 폭의 총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투자·고용·소득·소비 감소로 내수 침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연 어떻게 될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태양광·세탁기·철강·알루미늄 4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특정 품목이 아닌 다양한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과 더불어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주요 수출품에 고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 부과 대상국을 중국에 한정했던 1기 행정부와 달리,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적극 재정을 투자하고,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안보 등 강력한 산업정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캐나다·멕시코·EU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인데 그런 관점에서 향후 한국·일본·베트남도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최근 불법이민자 추방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고 국방비 분담금 이슈까지 있어 미국과의 협상 시 많은 카드(비관세장벽 철폐와 수입시장 개방 등)를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1기 행정부와 다른 특징은, 이번 2기 행정부는 기존의 FTA를 재협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60~70년대에 만들어진 무역법(Trade Act), 무역 확장법(Trade Expansion Act), 그리고 국제비상경제권환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하여 기존 FTA협정을 패싱하고 있다. 또한, 보편관세라는 생소하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관세율도 2.5~20% 정도로 높은 변동폭을 보이며, 관세정책 시행을 사전에 기한을 두고 발표하거나 기발표된 정책을 갑자기 유예하는 등, 소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고용·기술개발 계획에 차질을 주고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요컨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수출 감소 예상이 단순추정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나가며

2018년 한국 수출은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2018~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미중 관세정책 이후 2020년 5,124억달러로 15.3% 감소했다. 2024년 다시 한국 총수출은 6,83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세계 6위로 기록되었지만, 향후 1~2년간 수출 감소는 사실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한다. 현재 우리는 신산업 육성과 수출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제2의 산업화 시대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동시에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적극 재정을 투자하고,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안보 등 강력한 산업정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KIEP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chpark@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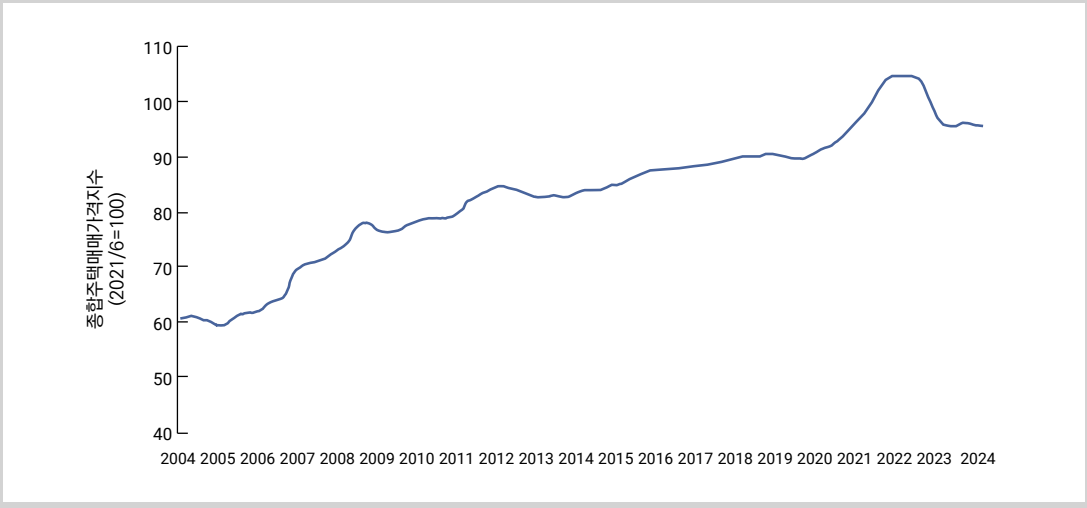
유연근무제도의 확산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 면면에 크고 작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았으며, 그 외에도 노동,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기침체와 다른 모습을 보인 측면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꼽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이래 2022년 1월까지

그림 1 **2004-2024 주택매매가격 변화**



출처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종합주택유형)」,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검색일자: 2024. 4. 16.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이라면,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다.

2년 동안 15.6% 상승하였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은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국가에서 경험하였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기침체기에는 자주 관측되지 않는 독특한 현상이다(윤성훈, 2021).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유사하게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도시경제학자들은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더불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및 원격 비대면 생활방식의 확대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를 제시한다(Schwartz and Wachter, 2023). 재정 및 통화정책의 경우, 국가재정 및 금융시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순간 위축된 소비와 생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저금리 등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대출이 증가하였고 주택 수요가 유지되어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한다.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전통적인 방식의 해석이라면,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주택가격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한 사회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다. Gamber et al.(2023)이 분석한 미국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은 지역(county)에서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였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특히 질 좋은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통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에 기반한 경제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위축시키는 한편 유연근무, 원격진료 등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확산과 부동산시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부동산시장도 코로나19 위기 기간 주택가격 상승폭이 매우 컸으며 이는 주거불평등, 자산불평등 및 가계부채 누적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온 만큼 본고에서는 재택 및 원격에 기반한 생활방식의 등장이 거주 및 업무를 위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다. 박정수·성주한(2022)은 화폐공급과 금리 등 거시 통화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위기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어, 통화정책 이외에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 전해정(2021)은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위기 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염병과 주택시장의 관계를 분석한 해외연구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 초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함을 보인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Allen-Coghlan and McQuinn, 2021; Del Giudice et al., 2020; Qian et al.,

2021). 하지만 원격근무와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주택수요가 도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하는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Ziemann et al., 2023; Brueckner et al., 2023; Liu and Su, 2021; Guglielminetti et al., 2021). 특히 주택수요 상승은 위기 직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그 이후에는 원격근무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재택근무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미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Gamber et al.(2023)와 Kmetz et al.(2022) 등은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주택가격 상승의 절반가량을 자가격리와 재택근무가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으며 Gupta et al.(2022)는 코로나19 이후 뉴욕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장기적으로 39% 감소하였음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Yang and Zhou, 2022)과 캐나다(Verma and Husain, 2020)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감염병 위기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이 관측되었다.

유연근무제의 사용 등 근무행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비롯하여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근무 환경의 변화와 주택가격 상승을 연구한 해외 사례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자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지역이 있는 등 유연근무 확산의 강도가 국내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도 더욱 크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신우리 외, 2024)에 따르면 국내 재택근무제 도입 및 활용 또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9.7%가 직장에 재택근무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국내에도 유연근무제가 정착되는 추이가 관측되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사용 등 근무행태 및 생활방식의 변화가 주택시장을 비롯하여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Gamber et al.(2023) 등 해외 선행연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유연근무제 확대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주거용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변화까지 동일한 설명자료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유연근무제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에 미친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코로나19 부가조사 자료이며, 이를 활용하여 2020~2022년 시군구별 평균 유연근무 도입률, 사용률 및 사용일수를 계산한다. 분석 모형은 시군구별 유연근무 사용 정도의 차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전후 주택가격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 사용일수를 주된 처치변수로 포함하여 유연근무 사용일이 많은 시군구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상이하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연근무 사용일수와 주택가격 모두에 영향을

유연근무 사용이 더 용이한 지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다른 지역과 상이하게 받았다면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또한 이질적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다.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있다면 유연근무 사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내생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연근무 사용이 더 용이한 지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다른 지역과 상이하게 받았다면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또한 이질적으로 변화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내생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Gamber et al.(2023)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시군구별 재택근무 가능 직종의 분포와 코로나19 발병률의 차이를 활용한 도구변수 방법론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에 재택근무 가능 직종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시군구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연근무 사용도 또한 높을 것이므로 해당 도구변수는 처치변수인 유연근무 사용일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며, 확진자 추이 및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경제적 상황을 통해서 도구변수를 구성하므로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경제적 변화와는 독립적이라 가정할 수 있다. 지역과 연도 고정효과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중차분법 이원고정효과 모형에 도구변수를 적용하며, 도구변수의 외생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취업률, 상근근로자비율, 인구수 차이 등 직종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다. 다만 도구변수 분석의 경우 도구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시군구가 아닌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주택가격의 동향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 연구배경을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핵심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코로나19 부가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자료로부터 분석표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짓는다.

Ⅱ. 연구 배경

1. 코로나19 확산과 주택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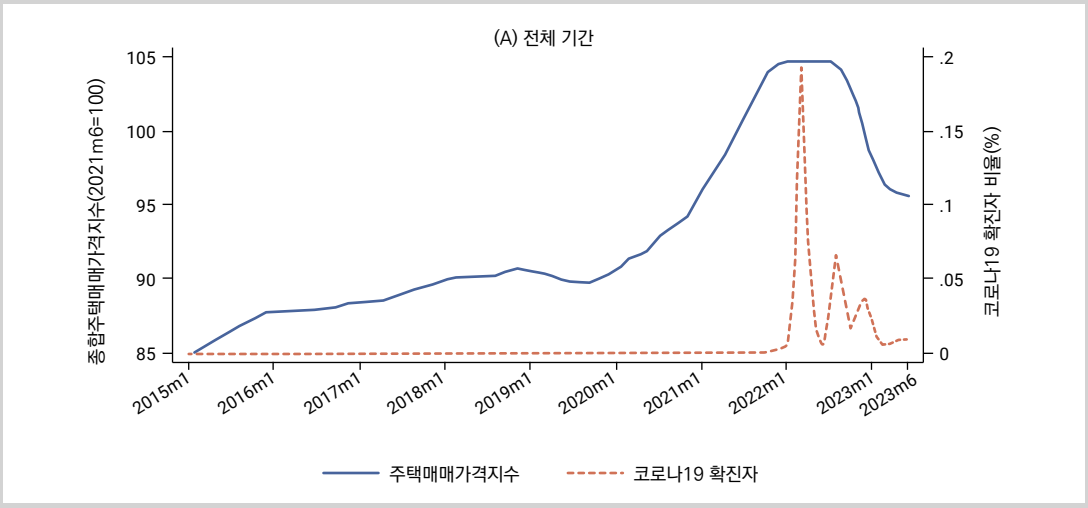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주택가격은 코로나19의 유행과 같은 시기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그림 2]는 주택가격과 코로나19의 유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아파트와 단독, 연립 주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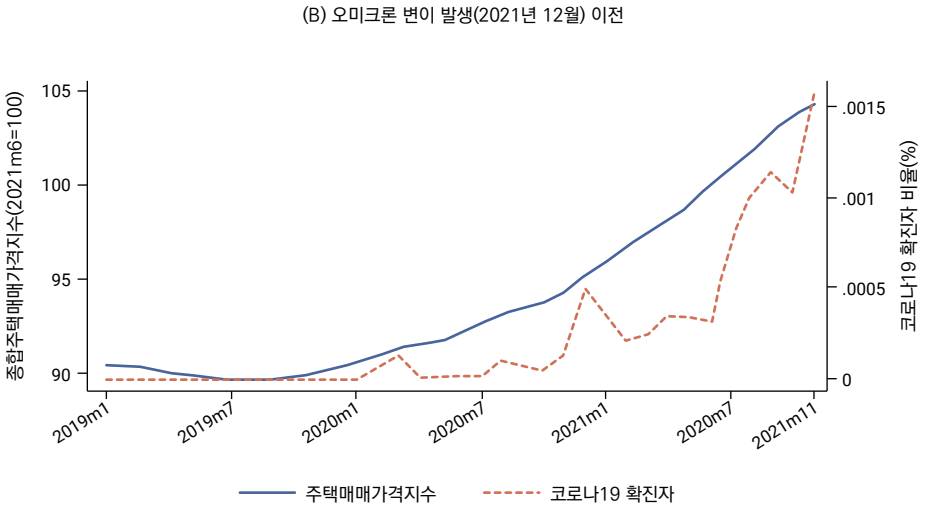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 매매가격 지수로서 한국부동산원에서 2012년부터 매월 공표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 전후 기간 주택가격과 확진자 추이를 모두 보여주는 패널(A)를 보면 확진자가 정점을 찍은 2022년 초에 주택가격 또한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두 변수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이 코로나19의 유행보다 앞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 초에 유행한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확진자 수 규모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커져 2022년 이전 확진자 패턴을 그림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에 가깝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을 확대하여 그린 패널(B)를 보면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을 확대하여 그린 패널(B)를 보면 2020~2021년 주택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확산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감 및 행동 변화는 변이 발생 이전에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의 대응 강도는 Hale et al.(2021)의 코로나19 정부 대응 강도 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강도는 위기 발생 초기인 2020년 초에 가장 높았으며 2021년 이후에는 꾸준히 낮아졌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22년에도 특별히 정부의 대응 강도가 2020년에 비하여 높아지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이에 대한 대응 강도가 높았던 것은 해당 시기 주택가격 상승과 행동 변화를 연관 짓는 본고의 가설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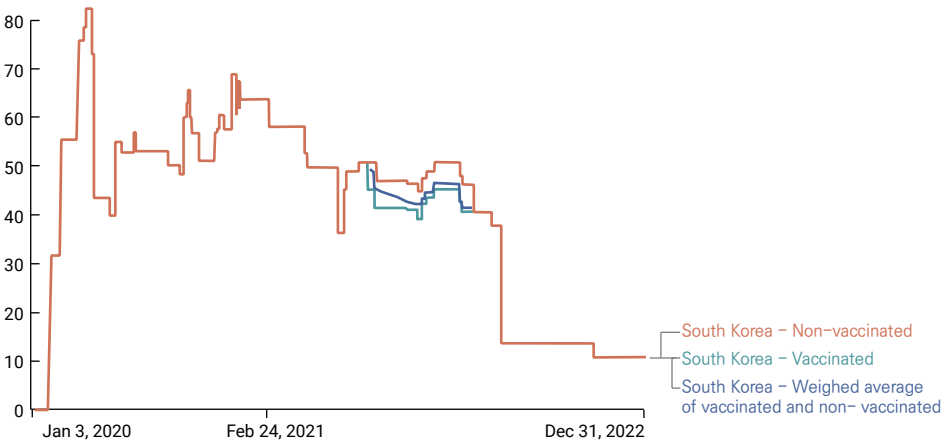
그림 2 **주택가격 및 코로나19 확진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발생현황」, 2023. 7. 31. 및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종합주택유형)」, https://www.reb.or.kr/r-one/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검색일자: 2024. 4. 16.

그림 3 **코로나19 대응 엄격성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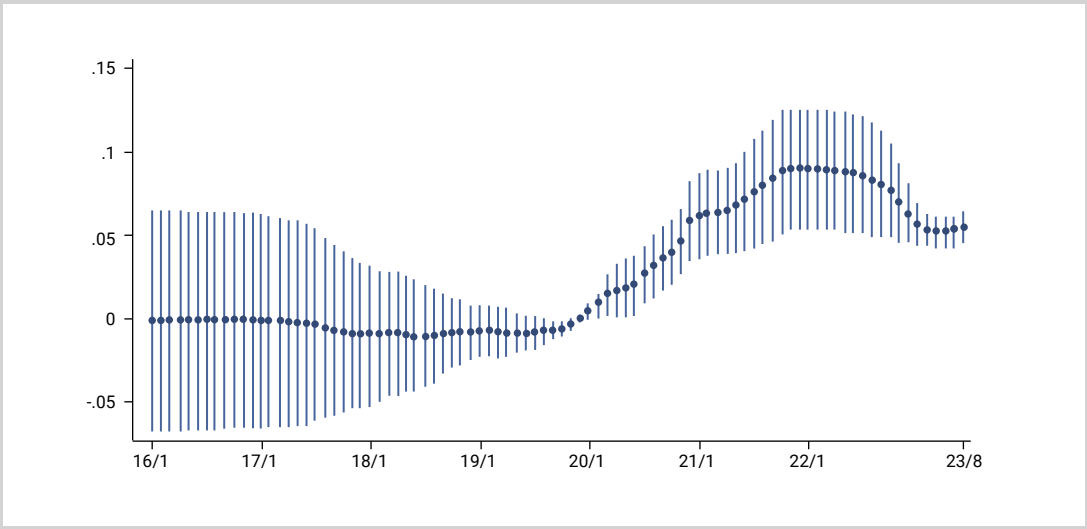


출처 Our World in Data, COVID-19: Stringency Index, https://ourworldindata.org/covid-stringency-index, 2024. 4. 16.

코로나19 확산과 주택가격 변화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자매연구인 Park(2023)에서는 시군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차이에 따른 코로나19 전후 주택가격 변화를 이원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4사분위에 속한 시군구는 확진자 비율이 1사분위에 속한 시군구에 비하여 코로나19 위기 기간 5%에서 10%의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하였다([그림 4] 참조).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주택가격 상승이 어떠한 경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유연근무 사용 행태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주택가격 상승이 어떠한 경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지 분석하고자 유연근무 사용 행태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한다.

그림 4 **코로나19 확산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출처 코로나19 확진자 수 4사분위에 속한 시군구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대적 주택가격 변화를 코로나19 확진자 수 1사분위에 속한 시군구의 주택가격과 비교한 Park (2023)의 이원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2. 유연근무제도

근무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도는 크게 근무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와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근무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재택근무제도와 원격근무제도가 있다. 재택근무제도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주거지 혹은 주거지 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근무하는 제도이며 원격근무제도는 근로자가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근무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주거지 혹은 주거지 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그에 따라 보다 질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를 상승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 관련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 가능한 근로시간의 최대치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월 혹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일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무제 등을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재량근무제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모두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육아, 학업, 가족돌봄, 퇴직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짧은 시간 근무하면서 전일제와 차별 없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가 있다.

표 1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운영방법**

유형	운영방법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근무제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출처 박정흠·김평식(2023), p. 34, [표 Ⅱ-7]

코로나19 위기 전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은 신우리 외(2024)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표 2〉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3년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중에서도 시차출퇴근제와 시간선택제, 선택근무제 등 법으로 명시된 근무시간 관련 유연근무제도의 도입률이 높으며 원격근무제와 재택근무제 등 근무장소 관련 유연근무제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도입률이 낮은 제도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발발 이후 도입률이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특히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2019년 6.3%에서 2023년 10.3%까지 꾸준히 높아졌으며, 원격근무제(8.8%), 재량근무제(9.0%) 등의 도입률 또한 2023년에 모두 과거에 비하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근무제 외의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활용실적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실제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표 2〉의 괄호 안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활용실적에 따르면 재택근무제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전 평균 1.2명에서 2.5명(사업체 기준) 수준에 머무르던 활용실적이 2020년 7.0명, 2021년 9.0명으로 매우 높아졌으나 이후 2년간 감소하여 2023년에는 6.2명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다소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23년 재택근무 활용실적은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2~3배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택근무제 외의 유연근무제도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활용실적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 유연근무제 도입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택근무제도의 활용 실적이 최근 다소 감소세에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도입된 유연근무제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 것은 아니며 각종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근무 행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무행태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도입률 및 활용실적**

(단위: %, 명)

연도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2017	13.9 (1.0)	15.3 (3.5)	8.9 (3.4)	7.4 (2.2)	3.6 (1.5)	4.4 (1.2)
2018	13.4 (1.7)	17.2 (5.3)	8.7 (4.3)	7.6 (3.4)	3.5 (2.8)	4.5 (1.5)
2019	13.2 (1.4)	16.5 (4.0)	8.6 (6.9)	7.0 (2.9)	4.4 (2.5)	6.3 (2.5)
2020	13.5 (2.3)	17.0 (5.6)	8.8 (5.6)	8.6 (2.7)	7.2 (3.0)	6.7 (7.0)
2021	15.7 (3.2)	16.5 (5.5)	7.4 (4.1)	7.2 (2.2)	6.4 (3.9)	7.4 (9.0)
2022	17.2 (3.4)	21.3 (6.5)	9.8 (4.5)	9.0 (1.9)	8.3 (3.9)	9.7 (7.3)
2023	17.8 (3.7)	21.6 (6.2)	10.0 (5.1)	9.0 (1.6)	8.8 (4.2)	10.3 (6.2)

출처 신우리 외(2024), pp.231-233, 〈표 V-1〉, 〈표 V-2〉 일부 발췌, 단위는 사업체 기준 %, 괄호 안은 명

본고의 연구가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기점으로 확대된 유연근무제도의 사용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변화를 일으켜 주택매매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연구가설

본고의 연구가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기점으로 확대된 유연근무제도의 사용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변화를 일으켜 주택매매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예는 재택근무의 경우로, 주택이 거주 전용 공간에서 사무 겸용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보다 넓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다. 재택근무 외에도 원격근무의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거주지 근방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주택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무장소가 아닌 근로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연한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주택에서의 가사, 양육 및 여가 등에 보다 양질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유형의 유연근무제 사용 또한 주택 수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본고의 분석의 범위에 포함한다. 물론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재택근무제도의 사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분석 또한 진행한다.

III. 연구방법론

1. 분석자료

본고의 분석자료는 시군구별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현황 자료(처치변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 자료(종속변수), 직종 분포 및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자료(도구변수)로 이루어진다. 우선 유연근무 관련 자료는 2020~2022년 한국노동패널의 코로나19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에서 각 연도에 1년간 꾸준히 같은 직장에서 근로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연근무제 사용일수 변수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2020~2022년 평균 $유연근무사용일_i$ 변수를 구성하였다. 계산에 활용된 임금근로자는 2020년 9,972명, 2021년 9,874명, 2022년 10,220명이다. 한편 유연근무제도 중 근로자의 생활권역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재택근무제도이므로 재택근무제도 사용일만 활용한 강건성 분석을 진행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사용일_i$

변수 또한 구성하였다. 각 시군구의 경제구조에 대한 통제변수로는 시군구별 2018년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과 상용직근로자 비율인 임금근로자$_i$, 상용직근로자$_i$ 및 인구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인구수의 대리변수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시장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두 가지를 활용하여 주택매매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 각각의 분석표본을 구성하였다. 우선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자료는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매월 26,343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해당 지수는 2021년 6월을 100으로 두며 본 분석에서는 매매가격지수에 로그를 취한 로그주택가격$_{it}$를 종속변수로 두었다. 해당 자료의 경우 전국 모든 시군구에 대하여 매매가격지수를 공표하지 않아 지수를 발표하는 181개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노동패널 자료와의 결합 과정에서 5개 시군구가 추가로 탈락하여 최종 주택가격 결합자료는 176개 시군구의 2012~2024년 균형패널로 구성되었다.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기반한다. 해당 조사는 매 분기 전국의 오피스 및 상가건물 약 7,000동(60,000호, 2019년 기준)을 조사하여 임대료, 수익률 등 부동산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데에 이용하는 자료다. 본 분석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원자료를 재가공하여 제공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중 월별 면적당 시장임대료 변수를 사용한다. 제공되는 시장임대료를 시군구별로 단순 평균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는 표본을 1~2년 주기로 재구성하여 시군구 단위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각 연도 자료의 1월과 12월 시장임대료를 이용하여 연간 면적당 임대료 상승률의 시군구별 평균을 계산한 후, 계산한 상승률을 이용하여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지수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을 100으로 두고 2016년부터 각 해의 시군구별 임대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임대료 변화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이렇게 구한 임대료지수에 로그를 취한 로그임대료$_{it}$로 두었다. 해당 자료에서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 시군구는 주택가격 지수의 경우보다 조금 적은 171개 시군구로, 결합자료는 171개 시군구의 2015-2023년 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도구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지역별 직종 분포는 2016~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A형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직종을 중분류까지 제공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재택근무 가능 직종을 구분할 수 있지만 시군구가 아닌 시군 단위의 지역

대안적으로 각 연도 자료의 1월과 12월 시장임대료를 이용하여 연간 면적당 임대료 상승률의 시군구 별 평균을 계산한 후, 계산한 상승률을 이용하여 연도별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지수를 구성하였다.

지역별 재택근무가능직종의 비율은 재택근무가능직종 종사자의 총 근무시간이 해당 지역 전체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정보를 제공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서울 및 광역시는 광역 단위에서, 도 지역은 기초 단위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자료를 결합하여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 지역만 표본에 남고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탈락하며, 그에 따라 도구변수 분석 표본의 시군구 개수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표본 각각 81개와 77개이다. 재택근무 가능 직종은 Dingel and Neiman(2020)의 방법론을 한국 자료에 적용한 최성웅(2020)의 분석 결과를 직종 중분류 단위에 적용하여 식별하였다. 지역별 재택근무가능직종의 비율은 재택근무가능직종 종사자의 총 근무시간이 해당 지역 전체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한편 도구변수 중 코로나19 발병률 자료는 감염병포털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 중 시군구별 누적 발병률을 활용하였다. 공식 발병률은 인구 십만명당 확진자 수로 정의하지만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인구 한명당 확진자 수, 즉 확진자 수를 해당 지역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을 발병률로 정의한다.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분석표본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 3〉에 제시한다. 주택 매매가격지수의 표준편차는 9.4,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지수의 표준편차는 4.5로, 분석기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계산한 시군별 유연근무 및 경제구조 변수는 두 표본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 유연근무제 사용일수의 시군구별 단순평균은 0.07일,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큰 0.09일로, 유연근무 사용

표 3 기초통계량

구분	주택 표본		상업용 부동산 표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택매매가격지수	94.9	9.4		
상업용 부동산임대료지수			98.4	4.5
유연근무제 도입률	0.11	0.10	0.11	0.09
유연근무제 사용일	0.07	0.09	0.06	0.09
재택근무제 사용일	0.04	0.07	0.04	0.07
재택근무가능직종비율	0.44	0.12	0.42	0,10
코로나19발병률(확진자/인구수)	0.63	0.06	0.63	0.06
임금근로자 비율	0.51	0.10	0.51	0.10
상용직근로자 비율	0.36	0.11	0.36	0.11
KLIPS 표본크기	144.1	100.7	145.1	101.9
표본크기	1,053		69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2012~2024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마이크로데이터」 2015~202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2018 자료;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행태에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택근무제 사용일의 평균은 0.04일, 표준편차는 0.07일로 확인되었다. 주택표본에서 재택근무가능직종비율의 평균은 0.44, 표준편차는 0.12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발병률의 평균은 0.63, 표준편차는 0.06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상업용 부동산 표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표본에서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및 상용직근로자 비율의 평균은 51%와 36%로 동일하며 평균적인 시군구 표본크기는 주택표본이 144개 상업용 부동산 표본이 145개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가장 낮았다.

〈표 4〉에는 한국노동패널의 코로나19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시도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사용 현황을 제시한다. 각 시도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 중 주된 직장에서 유연근무가 도입되었는지 여부와 본인이 유연근무를 사용한 일수 등의 변수를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유연근무제도 사용일수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기도 순으로 높았다. 시도별 유연근무 사용 행태와 임금근로자 비율을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유연근무 사용과

표 4 시도별 유연근무제도 및 근로자 현황

(단위: 명, 일)

지역(시도)	유연근무도입률	유연근무사용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서울특별시	.21	.30	.55	.40
부산광역시	.06	.04	.57	.38
대구광역시	.09	.06	.51	.37
대전광역시	.13	.09	.51	.38
인천광역시	.14	.04	.53	.44
광주광역시	.09	.04	.45	.34
울산광역시	.05	.03	.52	.43
경기도	.12	.11	.51	.38
강원도	.13	.04	.50	.30
충청북도	.12	.09	.54	.39
충청남도	.13	.03	.56	.43
전라북도	.10	.12	.49	.33
전라남도	.07	.02	.51	.34
경상북도	.12	.05	.50	.37
경상남도	.06	.07	.50	.39
제주도	.09	.01	.42	.22

주 1) 유연근무도입률: 직장 내 유연근무제도가 도입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유연근무사용일: 응답자 유연근무제도 사용일수의 평균
3)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뜻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근로자 비율이 모두 높았지만 높은 근로자비율이 반드시 높은 유연근무 사용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는 임금근로자와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지만 유연근무 사용률은 낮은 반면 전라북도는 근로자 비율이 낮음에도 유연근무 사용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연근무 사용 행태가 가장 높은 서울시의 구별 유연근무 사용 현황을 살펴본다. 〈표 5〉에 따르면 유연근무 사용일이 많은 구는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구는 강북구, 금천구, 구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양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표 5 서울시 유연근무제도 및 근로자 현황

(단위: 명, 일)

지역(구)	유연근무도입률	유연근무사용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강남구	.33	.34	.63	.42
강동구	.14	.25	.44	.30
강북구	.15	.09	.57	.34
강서구	.28	.32	.56	.40
관악구	.11	.21	.56	.40
광진구	.20	.46	.55	.36
구로구	.17	.12	.58	.44
금천구	.14	.10	.54	.38
노원구	.23	.21	.55	.36
도봉구	.20	.17	.46	.30
동대문구	.19	.18	.51	.31
동작구	.21	.19	.62	.48
마포구	.23	.38	.49	.38
서대문구	.17	.28	.60	.47
서초구	.26	.51	.48	.33
성동구	.17	.30	.57	.39
성북구	.31	.35	.58	.39
송파구	.24	.78	.50	.38
양천구	.23	.19	.54	.45
영등포구	.19	.49	.57	.41
용산구	.28	.58	.69	.59
은평구	.18	.18	.58	.43
종로구	.23	.27	.58	.43
중구	.13	.22	.59	.48
중랑구	.16	.20	.51	.33

주 1) 유연근무도입률: 직장 내 유연근무제도가 도입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
2) 유연근무사용일: 응답자 유연근무제도 사용일수의 평균
3)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뜻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애초에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유연근무 사용 또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앞서 우려한 유연근무 사용 행태와 지역 경제 상황 간의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어 내생성 우려가 발생함을 시사한다.

대체로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애초에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유연근무 사용 또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2. 실증분석 전략

본 분석의 목표는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주택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가설은 유연근무제도 사용으로 거주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기본 회귀분석 모형은 시군구별 선형추세 및 연도×시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이원고정효과 모형이다.

$$\log P_{it} = \beta \text{코로나19}_t \times \text{유연근무사용일}_i + \gamma \text{코로나19}_t \times X_i + \mu_i Year_t + \lambda_{tp} + \epsilon_{it} \quad (1)$$

이때 P_{it}는 시군구 i의 t년도 주택매매가격지수 혹은 상업용 부동산임대료지수이며 코로나19_t는 $t \geq 2020$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X_i는 시군구 i의 2018년 임금/상용근로자 비율과 인구수를 대리하는 한국노동패널 표본크기이며 $\mu_i Year_t$, λ_{tp}는 각각 시군구별 선형추세와 연도×시도 고정효과, ϵ_{it}은 시군구 단위에서 군집한 표준오차이다.

분석에서 관심을 가지는 추정계수는 β로, 유연근무 사용일이 많은 시군구의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택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상대적 변화를 추정한다. 본 모형 역시 이원고정효과 모형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내생성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통제되지 않은 제3의 요인이 유연근무사용 행태와 주택가격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생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Gamber et al.(2023)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유연근무사용일_i에 대한 도구변수를 아래의 식과 같이 도입한다.

$$\widehat{\text{유연근무사용일}_i} = \text{코로나19발병률}_i \times \text{재택근무가능직종비율}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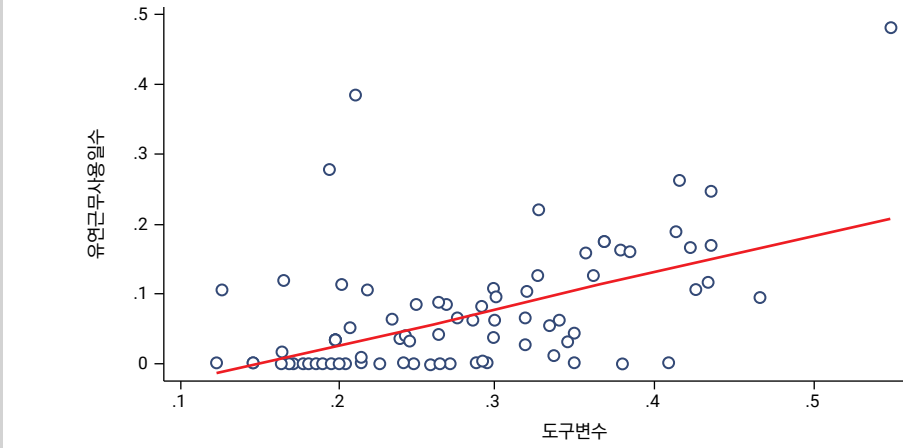
이때 코로나19발병률_i은 해당 시군구의 누적 발병률이며, 재택근무가능직종비율_i은 2016~2018년 기간 해당 지역 재택근무 가능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전체 직종

주택 표본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의 직종을 고려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표본의 경우 해당지역 소재 직장의 근무자의 직종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근무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 표본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의 직종을 고려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표본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직장의 근무자의 직종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도구변수 방법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구변수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도구변수와 처치변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도구변수가 회귀식의 오차항과 독립이어야 한다는 외생성 조건이다. 첫 번째 조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에 재택근무 가능 직종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시군구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연근무 사용빈도 또한 높게 나타날 경우 만족한다. 이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5]에서 도구변수와 처치변수의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유연근무 사용일과 도구변수의 상관관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2018 자료;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도구변수 타당성의 두 번째 조건인 외생성의 경우 자료를 통하여 쉽게 검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방법론의 타당성은 확진자 추이 및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경제적 상황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제 여건의 변화와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별 주택가격을 연도별로 통제하였고 또한

유연근무 사용일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과 체계적으로 다른 주택가격 추이를 보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주택가격의 선형 추세를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 비율 및 인구수 변화 등 지역별 경제 여건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변화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 사용일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값은 0.623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비하여 큰 값이 추정되었다.

Ⅳ. 분석결과

먼저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6〉에 제시한다. 표의 (1)열에는 서울과 광역시를 포함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식 (1)에 대응하는 일반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진행한 결과를, (2)열에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3)열에는 도 지역을 대상으로 도구변수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각각 제시한다. (1)열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표본에서 유연근무 사용일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정한 값은 0.222이며 사용일과 주택가격 사이의 이러한 양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값의 의미를 해석하면, 거주자의 유연근무 사용일이 평균 1일 더 많은 시군구에서 그렇지 않은 시군구에 비하여 주택매매가격이 24.9%[1] 더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값이 지나치게 커보일 수 있으나 처치변수인 유연근무 사용일의 평균이 0.07일, 표준편차가 0.09일임을 감안하면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즉, 거주자의 유연근무 사용일이 1표준편차(0.09일)만큼 높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2.0%[2] 더 상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열의 도 지역 대상 선형회귀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 사용일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값은 0.277이며,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거주자의 유연근무 사용일이 1표준편차만큼 높은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2.5% 더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였으므로 계수 0.222의 해석은 설명변수가 1단위(1일) 증가하였을 때 종속변수는 $e^{0.222}-1 \approx 0.249$, 즉 24.9% 상승한다고 해석함

2) $e^{0.222 \times 0.09}-1 \approx 0.020$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연근무 사용의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3)열에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 사용일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값은 0.623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선형회귀분석 결과에 비하여 큰 값이 추정되었다. 이는 유연근무 사용일 변수의 내생성이 실제 효과를 과소추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였음을 뜻한다. 해당 추정값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수치를 해석하면 유연근무 사용일이 1표준편차 높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약 5.8%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 회귀분석 추정값이 일반선형회귀분석 추정값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도구변수가 약한 도구변수(weak instrument)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약한 도구변수 문제는 도구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을 때에 발생한다. 하지만 두 변수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는 이미 앞서 [그림 5]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통계학적으로 약한 도구변수 여부를 검정하는 두 종류(Cragg-Donald, Kleigen-Paap)의 왈드 검정을 시행하였을 때에도 F-값이 충분히 큰 것으로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약한 도구변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 식별(underidentification) 여부를 검정하는 Kleibergen-Paap LM 검정 결과 역시 과소 식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6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구분	로그 주택매매가격지수		
	(1) OLS	(2) OLS	(3) IV
코로나19$_t$ × 유연근무사용일수$_i$	0.222***	0.277**	0.623***
	(0.053)	(0.116)	(0.203)
표본크기	2,262	1,053	1,053
지역 구분	전체 표본	도 지역	도 지역
코로나19×시군(구) 통제변수	O	O	O
시군구, 연도×시도 고정효과	O	O	O
시군(구) 선형추세	O	O	O
Kleibergen-Paap rk LM			7.6
Cragg-Donald Wald F			3362.3
Kleibergen-Paap Wald rk F			16.8

주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2012~2024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마이크로데이터」 2015~202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2018 자료;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연근무 사용의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선형회귀분석 결과 유연근무 사용일이 1표준편차(0.09일)만큼 증가할 때 전국 주택가격은 2.0%, 도 지역의 주택가격은 2.5%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분석 결과 같은 변화가 도 지역의 주택가격을 5.8%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 도구변수는 약한 도구변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도가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식 (1)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한다. 일반선형회귀분석 결과와 도구변수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의 값이 추정되었다. 점추정값에 따르면 유연근무 사용일수가 높은 직장이 많이 분포한 지역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가 하락하였다. 도구변수분석의 점추정값인 −0.125를 그대로 해석하면 도 지역 시군 근무자의 유연근무 사용일수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1.1% 하락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이 수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표 7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구분	로그 상업용 부동산임대료지수		
	(1) OLS	(1) OLS	(3) IV
코로나19$_t$ × 유연근무사용일수$_i$	−0.016 (0.027)	−0.013 (0.058)	−0.125 (0.110)
표본크기	1,512	693	693
지역 구분	전체 표본	도 지역	도 지역
코로나19×시군(구) 통제변수	O	O	O
시군구, 연도×시도 고정효과	O	O	O
시군(구) 선형추세	O	O	O
Kleibergen-Paap rk LM			7.0
Cragg-Donald Wald F			177.1
Kleibergen-Paap Wald rk F			12.2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2012~2024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마이크로데이터」 2015~202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2018 자료;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유연근무 대신 재택근무 사용일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강건성 분석 결과를 〈표 8〉에 제시한다. 주택매매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일반선형회귀분석과 도구변수분석 결과 모두 전체 유연근무 사용일수를 설명

유연근무제 사용의 확산이 주택가격 상승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다소 하락한다는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변수로 하였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정치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한 소폭 상승하였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친 영향은 주된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경우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유연근무 유형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을 때보다 강한 추정치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우며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 주택매매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 유연근무제 사용의 확산이 주택가격 상승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다소 하락한다는 추정치가 도출되었다. 두 표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유연근무의 확산에 따라 주거 수요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옮겨갔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변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요인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연근무제 확대 양상과 연관되어 나타났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유연근무로 인한 수요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8 재택근무제도 사용이 주택매매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

구분	로그 주택매매가격지수		로그 상업용 부동산임대료지수	
	(1) OLS	(2) IV	(3) OLS	(4) IV
코로나19$_t$ × 재택근무사용일수$_i$	0.295**	0.806***	-0.042	-0.165
	(0.147)	(0.301)	(0.074)	(0.150)
표본크기	1,053	1,053	693	693
지역 구분	도 지역	도 지역	도 지역	도 지역
코로나19×시군 통제변수	O	O	O	O
시군구, 연도×시도 고정효과	O	O	O	O
시군 선형추세	O	O	O	O
Kleibergen-Paap rk LM		5.91		5.34
Cragg-Donald Wald F		380.6		178.7
Kleibergen-Paap Wald rk F		12.0		8.1

주 *** $p<0.01$, ** $p<0.05$, * $p<0.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2020~2022 자료; 한국부동산원,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 2012~2024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마이크로데이터」 2015~202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2018 자료; 감염병포털,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Ⅴ.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를 이해할 때 유연근무 사용 실태 등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 행태 파악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확산된 유연근무제의 사용이 같은 시기 관측된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재택근무 등 주거공간 활용도의 증대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는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분석되었으나 유사한 주택가격 상승을 거친 한국에서는 그 연관성이 분석된 바 없어 본고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주택매매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노동패널 코로나19 부가조사 자료,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 및 상업용 부동산임대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및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후 평균 유연근무 사용일수가 높은 시군구에서 그렇지 못한 시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을 경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구변수를 적용한 이중차분법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내생성을 최대한 통제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연근무제도 사용일수가 1표준편차만큼 높은 도 지역 시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대조군에 비하여 5.8% 상승하였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유연근무제 사용일수 확대가 통계적 유의성은 낮으나 임대료 하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즉, 유연근무제도 사용 확대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택으로 부동산 수요를 옮겼다는 연구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관측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를 이해할 때 유연근무 사용 실태 등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 행태 파악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거와 사무 공간의 활용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유연근무제도 사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축소된다면 주택가격에 또 다른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수요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이 조정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중장기적 수요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근무행태 변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보건 위기 및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다양한 간접적인 경로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무 및 생활방식의 중장기적인 변화가 주택시장 외에도 경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분석이 코로나19 위기 기간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앞으로 마주할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IF

참고문헌

박정수·성주한, 「Covid-19 등 팬데믹 이후의 부동산시장에 관한 연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제20권 제4호, 2022, pp. 1~20.

박정흠·김평식, 『코로나19 위기가 근로자 정신건강 및 근무행태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윤성훈,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한국보험연구원, 2021.

신우리·전기택·주재선·강민정·최진희·김효경·이기재,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4.

전해정, 「소비심리와 코로나-19가 지역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21(5), 2021, pp. 3211~3220.

최성웅, 「재택근무가가능한 일자리의 특성과 분포: 물리적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2020, pp. 276~291.

Allen-Coghlan, M. and McQuinn, K. M.,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on the irish housing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Housing Markets and Analysis*, 14(4), 2021, pp. 636~651.

Brueckner, J. K., Kahn, M. E., and Lin, G. C., "A new spatial hedonic equilibrium in the emerging work-from-home economy?,"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5(2), 2023, pp. 285~319.

Del Giudice, V., De Paola, P., and Del Giudice, F. P., "Covid-19 infects real estate markets: Short and mid-run effects on housing prices in campania region (italy)," *Social Sciences*, 9(7), 2020, 114.

Dingel, J. I. and Neiman, B., "How many jobs can be done at h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89, 2020, 104235.

Gamber, W., Graham, J., and Yadav, A., "Stuck at home: Housing dem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9(101908), 2023.

Guglielminetti, E., Loberto, M., Zevi, G., and Zizza, R., *Living on my ow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housing demand*, Bank of Italy, 2021.

참고문헌

Gupta, A., Mittal, V., and Van Nieuwerburgh, S., *Work from home and the office real estate apocalyps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Hale, T., Angrist, N., Goldszmidt, R., Kira, B., Petherick, A., Phillips, T., Webster, S., Cameron-Blake, E., Hallas, L., Majumdar, S., and Tatlow, H., "A global panel database of pandemic policies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Nature Human Behaviour*, 5, 2021, pp. 529~538.

Kmetz, A., Mondragon, J., and Wieland, J., *Remote work and housing demand*,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2022.

Liu, S. and Su, Y.,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demand for density: Evidence from the us housing market," *Economics Letters*, 207, 2021, 110010.

Park, C, *COVID-19, Housing Price, and Inequality*, unpublished., 2023.

Qian X, Qiu S, and Zhang, G.,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ing price: Evidence from China," *Finance research letters*, 2021.

Schwartz, A.E., and Wachter, S., "COVID-19's Impacts on Housing Markets: Introduction,"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59(B), 2023.

Verma R. and Husain R., The resilience and strength of the new housing market during the pandemic, Statistics Canada, 2020.

Ziemann, V., Bétin, M., Banquet, A., Ahrend, R., Cournède, B., Caldas, M.P., Ramirez, M.D., Pionnier, P.A., Sanchez-Serra, D., and Veneri, P., Urban house price gradients in the post-COVID-19 era, OECD, 2023.

Yang, M. and Zhou, J.,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housing market: evidence from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in China," Applied Economics Letters, 29(5), 2022, pp. 409~412

정책토론리포트

제63회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개요

- **주　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 **일　시** 2025년 1월 22일(수), 14:00~15:10
- **장　소**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프로그램

14:00~14:05	**인사말씀**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14:05~14:10	**발제자 소개**
	이남국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14:10~14:50	**주제 발표**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4:50~15:10	**자유 토론**
15:10	**폐회**

본 원고는 2025년 1월 22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에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63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말씀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이 공공기관의 효과성, 효율성 개선을 위한 비전과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유일호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Ⅰ.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간 부문은 창의적 혁신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독점이나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Ⅱ. 공공기관의 역할과 규제의 적정성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인 구조를 유지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정책의 경우, 민간 부문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정부 정책의 한계와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으며, 정책이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이 시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Ⅳ. 결론: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공공기관은 시장과 정부의 균형 속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규제 정책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장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 전체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최근호 | 공공기관연구센터 공공정책2팀장

Q.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저성장 사회, 축소사회의 국면에 진입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규제 및 관리정책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위원장님의 경험에 기반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에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긴 하였으나, 실제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많이 걱정도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면서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여성과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수준을 높이고, 이민을 통한 해외 인력을 적극 활용하거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을 연계하는 방안 등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잘 부응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도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육아 지원 정책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응답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학에서 자주 소개되는 '바그너의 법칙'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법칙은 정부의 업무프로세스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듯이 입법부의 역할에서도 공공성과 더불어 효율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의원입법을 통해 신설된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최근 20년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정부의 규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신설하여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신설이 남용될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연계된 차원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신설, 각종 규제입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부의 규제, 공공기관 신설을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하게 설립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문제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재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적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기관 차원에서도 자체 수익을 통해 부채를 갚아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조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무조건 줄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각종 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이남국 | 좌장(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민간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OECD 글로벌 조세협정 거부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미국 재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주 OECD 미국대표부 대사에게 전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1]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OECD 글로벌 조세협정(OECD Global Tax Deal)[2]은 미국에서 어떠한 효력이나 효과도 없다고 명확히 밝힘[3] [4] [5]

- 미국 의회가 OECD 글로벌 조세협정을 입법하지 않는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협정 관련 정책은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주 OECD 미국대표부 대사는 이를 OECD에 통보할 것을 명함
- 또한 미국 재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불이행하는 국가 또는 미국 기업에 부당한 조세 정책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를 조사하고, 이러한 불이행 또는 조세 정책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고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명함

– 미국 재무부 장관은 2025년 1월 2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보고해야 함

1)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문서임

2) OECD 글로벌 조세협정: 필라1(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포함됨)과 필라2(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한세-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하고자 함)

3) The White Hous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Global Tax Deal(Global Tax Deal)," 보도자료, 2025. 1.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the-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and-development-oecd-global-tax-deal-global-tax-deal/, 검색일자: 2025. 2. 6.

4) IBFD, "United States Denounces OECD Global Tax Deal," 2025. 1. 2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1_us_4.html, 검색일자: 2025. 2. 6.

5) Bloomberg Law News, "OECD Global Tax Deal Has No Force In US, Trump Says (1)," 2025. 1. 2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4T1HRFC00000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jcite, 검색일자: 2025. 2. 6.

캐나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보류

◆ 캐나다는 2025년 2월 3일, 2025년 2월 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함[6]

- 캐나다 재무부는 2025년 2월 1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대상 목록을 공개함[7]

– 음료, 화장품, 종이 제품, 가정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 자동차, 항공우주 부품, 농산물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도 대상임

– 동 조치는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2025년 2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음

- 캐나다는 2025년 2월 3일, 미국과 국경 안보 합의에 도달한 후 관세 부과를 우선 보류하기로 함

아일랜드

비협조적 관할권 거주 법인에 대한 CFC 면제 부인 지침 발표

◆ 아일랜드 국세청은 2025년 1월 24일, CFC가 조세목적상 비협조적 관할권의 납세 거주자인 경우 CFC 면제를 부인하는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함[8] [9]

-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i) 유효세율 면제, (ii) 낮은 이익률 면제, (iii) 낮은 회계상 이익 면제는 CFC가 조세목적상 EU 비협조 관할권 목록[10]에 포함된 관할권에 거주하는 회계기간 중에는 적용되지 않음

– (i) 유효세율 면제(effective tax rate exemption)는 회계기간 동안 CFC가 납부하거나 부담한 외국 세액이 해당 회계기간 동안 아일랜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

6) IBFD, "Canada Pauses Tariffs on US Goods after Making Key Border Security Commitments," 2025. 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4_ca_1.html, 검색일자: 2025. 2. 7.

7) Government of Canada, "List of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25 per cent tariffs effective February 4, 2025," 2025. 2. 3.,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5/02/list-of-products-from-the-united-states-subject-to-25-per-cent-tariffs-effective-february-4-2025.html, 검색일자: 2025. 2. 7.

8) IBFD, "Ireland – Revenue Denies CFC Exemption to Entities Resident i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2025. 1.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7_ie_3.html, 검색일자: 2025. 2. 10.

9)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23/25 –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2025. 1. 24.,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5/no-0232025.aspx, 검색일자: 2025. 2. 10.

10) 현재(2024년 10월 8일 기준) 조세목적을 위한 EU 비협조국 목록(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에 포함된 11개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앵귈라, 피지, 괌, 팔라우, 파나마, 러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임(자료: EU,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는 면제 조항임[11]

- (ii) 낮은 이익률 면제(low profit margin exemption)는 CFC의 회계상 이익이 관련 영업비용(operating costs)의 1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임
- (iii) 낮은 회계상 이익 면제(low accounting profit exemption)는 CFC의 회계상 이익이 75만 유로[12] 미만이고 해당 이익 중 비거래 소득(non-trading income)이 7만 5천유로[13]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면제 조항임

- 또한 지침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배당과세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미배당 소득으로 처리됨
- 마지막으로, 필라2 규칙에 따라 발생하는 외국 적격소재국추가세(QDTT)가 CFC 규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려면 해당 외국 QDTT를 해당 CFC가 납부하거나 부담해야 함

독일

주거용 건물 에너지 관련 조치 세금 감면 증명서 통합

◆ 독일 재무부는 주거용 건물의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 증명서 통합 개정을 발표함[14]

- 독일 재무부(BM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세금 감면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통일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이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관련 조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여러 증명서를 하나의 통합된 증명서로 일원화한 것임
- 해당 증명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조치의 세금 감면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관련된 업체와 담당자들이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게 됨

- 또한, 재무부는 어떤 건물 개보수 조치가 자금 지원 대상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자가 주택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임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B2B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 독일 정부는 디지털 전략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B2B 전자 인보이스 의무 발행을 결정함

-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전자 인보이스(e-Envoice)는 구조화된 전자 형식으로 발행,

11) IBFD, "Ire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0. Anti-Avoidance (Last Reviewed: 1 November 2024),"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ie_s_10.4.%23cta_ie_s_10.4., 검색일자: 2025. 2. 17.

12)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억 3,357만원임

13)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1,336만원임

14) IBFD, "German Federal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nformation on Green Incentives for Energy-Related Measures on Buildings", 2025. 1.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3_de_1.html, 검색일자: 2025. 2. 5.

전송, 수신되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인보이스를 의미하며 디지털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함

- 전자 인보이스 의무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일부 면세 공급(보험, 금융서비스 등), 소규모 소액 청구 등은 제외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함
  - 공급자와 수취인이 모두 개인이 아닌 기업임(B2B)
  - 두 기업 모두 독일 내에 설립되어야 함
  -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장소가 독일임
  - 거래가 부가가치세 공제권 없이 면세되지 않음
- 2025년부터 모든 기업은 전자 인보이스를 수령할 의무가 있으며 2026년도까지 종이 인보이스 발행이 가능하나, 2027년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 인보이스 발행이 필수적 요건이 되며, 미발행 시 행정처벌 대상이 됨
- 해당 조치로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초기 행정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 회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스위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관련 논의 시작

◆ 스위스 연방평의회(Bundesrat/Federal Council)는 2025년 1월 29일,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한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15) 16)]

- 다국적 기업이 조세 관련 정보를 하나의 관할국에 제출하면,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관할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금 계산이 정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임
- 또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국가 간 정보교환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검토하고자 함
- 이번 논의의 목표는 스위스가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정보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연방평의회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그리고 EU 회원국)도 정보교환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논의는 2025년 5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국가 간 정보교환의 법제화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논의될 것이며 해당 법안은 2025년 상반기에 논의될 예정임
- 연방평의회는 OECD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국제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과 스위스의 세원 확보임

15) Der Bundesrat – Das Portal der Schweizer Regierung, "Bundesrat eröffnet Vernehmlassung zum Informationsaustausch in Sachen OECD-Mindestbesteuerung," 보도자료, 2025. 1. 29., https://www.admin.ch/gov/de/start/dokumentation/medienmitteilungen.msg-id-103974.html, 검색일자: 2025. 2. 12.

16) IBFD,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Information Exchange Under Pillar Two," 2025. 1.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29_ch_1.html, 검색일자: 2025. 2. 12.

스페인

주택의 임대 및 취득 관련 세금 조치 발표

◆ 스페인 정부는 2025년 1월 13일, 주택의 임대 및 취득과 관련한 세금 조치를 제안함[17]

- (소득세 면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00% 면제함
  - (면제조건) 임대료를 기준가격지수(Índice de Precios de Referencia, IPR)[18]에 맞춰야 하고 현재 임대료가 IPR보다 높은 경우 임대료를 최소 5% 낮춰야 함
- (비거주자의 주택 취득 제한) EU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스페인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부동산 가치의 최대 100%까지 부과함
- (세제혜택 적용 대상 제한) 부동산투자제도(Sociedades Anónimas Cotizadas de Inversión en el Mercado Inmobiliario, SOCIMI)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SOCIMI 기업으로 제한함
- (관광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 관광 아파트 임대를 상업활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덴마크

OECD 행정지침 이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 덴마크 국세청은 2025년 2월 3일, 최저한세 규정, 특정 국가의 적격 유통업자 보수, 투명기업 재분류 규정 조정, 이전가격(TP) 문서화 규정 완화 및 국제 공동 과세 및 공시 요건 등에 관한 OECD 행정지침 적용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함[19]

-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필라2에 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최저한세법(Minimumsbeskatningsloven)에 따른 규칙과 법인세법(Selskabsskatteloven)에 따른 국제 공동 과세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여 두 규칙 간의 상호작용이 의도하지 않은 과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간소화된 방식을 선택한 국가에서 덴마크 기업이 적격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통제하는 경우, 일반적인 독립기업원칙에서 일부 벗어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함

17) IBFD, "Government Proposes Tax Measures to Address Rising Housing Prices," 2025. 1.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1-15_es_1.html, 검색일자: 2025. 2. 7.

18) IPR은 스페인 정부가 임대 가격의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주택 시장의 표준 임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9) IBFD, "Amendment Bill in Depth: Tax Ministry Seeks to Amend Minimum Taxation Act, Other Tax Laws, Simplify TP Documentation," 2025. 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4_dk_1.html, 검색일자: 2025. 2. 10.

- 덴마크는 2024년 2월 OECD의 "Amount B 보고서"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특정 유통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결정 간소화를 추진중에 있음
- 과세대상 기업의 범위, TP 문서 작성 요구 사항, 그리고 문서 작성이 필요한 통제 거래 범위에 대한 구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
- 납세자의 총 통제 거래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5백만DKK[20] 미만인 경우, 통제 거래에 대해 TP 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 도입을 제안함
- 다만,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거래 또는 덴마크와 조세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배당금 및 출자금 형태의 통제거래에 대해서는 TP 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도록 제안되었으며, 조세투명기업을 통해 이루어진 특정 투자에 대해서도 TP 문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제안됨

- 투명기업의 재분류에 관한 「법인세법」 제2조 제C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여, 관할국 간 분류 차이(즉, 혼성불일치)를 악용하는 투명기업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과세 면제를 허용함
- EU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방어 조치 규칙이 적용되는 국가 목록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제안함
- 본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의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은 2025년 3월 3일까지임

신규 녹색자산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 허용 법안 협의

◆ 덴마크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신규 녹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준액의 일시적 증가 시행에 관한 협의를 위한 법안을 발표함[21]

- 이 법안은 2022년 6월 24일 체결된 녹색 세제 개혁에 대한 협정(Aftale om grøn skattereform)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30일 체결된 녹색 투자 기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
- 법안에 제안된 내용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였고 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규 자산의 취득 비용의 108%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투자 기간을 도입함
- 자체 에너지 공급을 통해 화석연료로 구동되거나 구동 가능한 기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승용차, 선박 및 소프트웨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된 감가상각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격자산의 범위는 덴마크 「감가상각법」 제5조 제D항에 명시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해당 조항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16%의 감가상각이 가능한 녹색 투자 기간을 제공함
- 이번 협의는 2025년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20)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억 455만원임

21) IBFD, "Ministry of Taxation Opens Consultation on Bill to Allow Additional Depreciation Under Green Investment Window," 2025. 2.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5-02-03_dk_1.html, 검색일자: 2025. 2. 10.

일본

적격소재국추가세 법안 의회 제출

◆ 2025년 2월 4일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이하 QDMTT)와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이하 UTPR)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22]

- 일본이 제안한 QDMTT은 필라2의 핵심적인 규칙인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GloBE)에 따른 것으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23]이 그다음으로 적용되며,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해외 자회사의 수입에 대해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음
- 최종 모기업 관할국이 IIR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으면 UTPR이 적용되며, UTPR을 시행하는 자회사 관할국이 추가로 과세할 수 있음
- 제출된 법안의 적용대상은 일본 다국적 기업 그룹 또는 일본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 다국적기업이며,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각 회계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이내(특정한 상황에서는 18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함

인도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예산안 제안

◆ 인도 재무부는 2025년 2월 1일,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 부담 완화 내용을 포함한 2025~2026년 예산안을 제안함

- (소득세 면제) 연간 소득이 120만루피[24] 이하인 개인에게 소득세를 면제하며, 약 1천만명의 납세자가 면세점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세율 적용구간) 각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며, 약 8,750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 (기타소득세) 복권 당첨, 게임이나 경마 등에서 얻

22) Tax Note, "Japan Sends UTPR, Domestic Minimum Top-Up Tax Bill to Parliament," Stephanie Soong,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oecd-pillar-2-global-minimum-tax/japan-sends-utpr-domestic-minimum-top-tax-bill-parliament/2025/02/10/7r144, 2025. 2. 10., 검색일자: 2025. 2. 10.

23) 일본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IIR 규정을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일본 재무성, 「第211回国会における財務省関連法律」, https://www.mof.go.jp/about_mof/bills/211diet/st050203h.pdf, 검색일자: 2025. 2. 10.

24)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90만원임

은 상금에 대해 각 회계연도별로 1만루피[25]를 초과하는 총 상금에 대해 부과하던 세금을 각 건별로 1만루피[26]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 새로운 예산안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계소비와 저축,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직접세 약 1조루피,[27] 간접세 약 260억루피[28]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호주

녹색 세액공제 법안 상원 통과

◆ 호주 상원은 2025년 2월 10일, 주요 광물 및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을 통과시킴[29] [30]

- 본 법안은 137억호주달러[31] 규모의 생산 세액공제로, 전 세계적인 순 제로(Net zero)[32] 전환 추세에 따라 호주의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활용하여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되었음
- 주요 광물 프로젝트는 31개 광물[33] 중 하나를 처리하는 비용의 10%,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소 프로젝트는 킬로그램당 2호주달러[34]를 공제하며, 2027년에서 2040년 사이에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10년간 적용할 수 있음
-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는 프로젝트 운영자는 세액공제에 대한 대가로 지역 사회에 특정 혜택을 제공해야 함
- 본 법안은 하원을 거친 후 왕실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된 후 추가적인 공개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25)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6,000원임

26)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만 6,000원임

27)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6조 6,015억원임

28) 2025년 2월 10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316억원임

29) Parliament of Australia, "Future Made in Australia (Production Tax Credits and Other Measures) Bill 2024,"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query=Id%3A%22legislation%2Fems%2Fr7297_ems_00fa0e2e-bb91-4c72-9a66-086436d63677%22#_ftn2, 검색일자: 2025. 2. 11.

30) Bloomberg Tax, "Australian Senate Passes Green Tax Credits Bill," https://news.bloomberglaw.com/business-and-practice/australian-senate-passes-green-tax-credits-billm 검색일자: 2025. 2. 11.

31)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2조 5,518억원임

32)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 감축하고 잔여 배출량을 대기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

33) 고순도 알루미나, 안티몬, 비소, 베릴륨, 비스무트, 크롬, 코발트, 플루오르, 갈륨, 게르마늄, 흑연, 하프늄, 인듐, 리튬,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니켈, 니오브, 백금족 원소, 희토류 원소, 레늄, 스칸듐, 셀렌, 규소, 탄탈, 텔루르,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지르코늄

34) 2025년 2월 1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32원임

OECD

필라2 경과적격지위 목록 및 신고서 교환 MCAA 등 발표

◆ OECD는 2025년 1월 15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경과기간 동안의 국내 입법안 적격 지위 목록과 관련 행정지침을 발표함[35)]

● "경과적격지위 중앙입법안목록(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은 IIR(소득산입규칙), DMTT(소재국추가세) 또는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세이프하버 입법을 완료하여 경과기간의 적격 지위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록임[36)]

– 향후 필라2 전체 입법 이행은 상호검토(peer review)에 의할 예정이지만, 2024년 BEPS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간소화된 절차로서 경과기간 동안의 국내 입법안 적격 지위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함[37)]

–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한 국가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은 향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임

● 포괄적 이행체계는 목록 발표와 연계하여 필라2 모델규정 제9.1조에 대한 행정지침을 추가로 제공함[38)]

– 행정지침은 일반정부에 의하거나 2021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정된 신규 법인세 규정에 따라 발생한 특정 이연법인세 자산을 다국적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 OECD는 2025년 1월 15일,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GIR) 개정안, GIR 제출과 교환을 위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및 XML 스키마(사용자지침) 등 공조 행정을 위한 도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35) OECD, "Global minimum tax: Release of compilation of qualified legislation and information filing and exchange tools," https://www.oecd.org/en/about/news/announcements/2025/01/global-minimum-tax-release-of-compilation-of-qualified-legislation-and-information-filing-and-exchange-tools.html?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6-01-2025&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5. 2. 7.

36)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Central Record of Legislation with Transitional Qualified Statu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globe-rules-pillar-two-central-record-legislation-transitional-qualified-status.pdf, 검색일자: 2025. 2. 7.

37) OECD, "Qualified Status under the Global Minimum Tax –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qualified-status-under-the-global-minimum-tax-questions-and-answers.pdf, 검색일자: 2025. 2. 7.

3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Article 9.1 of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article-9-1-globe-rules-pillar-two-january-2025.pdf, 검색일자: 2025. 2. 7.

- GIR 개정안[39]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GloBE 규칙에 따른 과세권이 없는 관할국의 경우에 적용되는 간소화 및 명확화 내용을 담음[40]
  - 부록은 정보 교환을 통해 GIR을 수신할 것이라는 통지를 관할국이 다국적 기업 그룹에 요청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함
  - GIR 개정안과 관련하여 GloBE 모델규정 제8.1.4조 및 제8.1.5조에 대한 추가 행정지침을 발간함[41]

◆ GIR MCAA는 조세문제 상호행정협약에 따른 GIR 자동교환에 대한 요건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GIR XML 스키마는 공통 전자 형식에 GIR의 내용과 구조를 반영하도록 함[42]

- 추후 GIR 제출 및 교환 전에 적용되어야 하는 데이터 일관성 및 품질에 대한 검증 규정과 관련한 추가 작업이 공통접근 방식(common approach)으로 수행될 예정임

39) GIR은 2023년 7월 최초 발간됨

40)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E Information Return (January 202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5/01/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e-information-return-january-2025_b03274ed.html, 검색일자: 2025. 2. 7.

41)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Administrative Guidance on Article 8.1.4 and 8.1.5 of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January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administrative-guidance-article-8-1-4-article-8-1-5-globe-rules-pillar-two-january-2025.pdf, 검색일자: 2025. 2. 7.

42)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GloBE Information (January 2025),"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global-minimum-tax/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exchange-of-globe-information.pdf, 검색일자: 2025. 2. 7.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EU

◆ EU 이사회, 2026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25. 2. 18.)[1] [2]

- (의의)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내년 예산안 초안을 준비하는 데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EU 예산 편성 지침을 설정
- (역할 및 원칙) EU 단년도 예산의 주요 역할인 EU 장기 목표 달성 및 정치적 우선순위[3] 이행을 강조(전년과 동일)
- (올해 주안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과 차세대 EU 이자 재원 문제를 언급
  - (우크라이나)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유지하고, 회복과 장기 재건에 힘쓰는 등 연대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
  - (차세대 EU) 차세대 EU 프로그램의 이자 지급 비용을 2025년 기존 예산 한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026년 예산 초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예산 집행 잔여 금액 및 우선순위 재조정, 특별수단 항목 등을 통해 조달)
  - (EU 프로그램 이행 보장) 지역 긴급 지원 프로그램[4]

---

1) EU 이사회, "EU annual budget 2026: Council sets guidelines for next year's EU budget," 2025. 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2/18/eu-annual-budget-2026-council-sets-guidelines-for-next-year-s-eu-budget/, 검색일자: 2025. 2. 19.

2) EU 연간 예산 일정
   - 2월 EU 이사회 및 의회, 예산편성 지침 채택
   - 3월 이사회 및 의회, 양측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주요 날짜에 합의
   - 통상 5월말 EU 집행위, 예산초안 작성 및 EU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
   - 7월 이사회, 예산초안에 대한 입장 발표
   - 9월 이사회, 입장 채택 및 의회에 송부
   - 9월~10월 이사회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은 후 42일 이내 의회는 이사회 입장 승인 혹은 수정안 채택
   - 10월 이사회, 의회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소집되고 21일 이내에 합의문서(Joint text)에 동의 EU 집행위, 다음 해 최신 전망 기준 예산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출
   - 11월~ 조정위원회 합의문서에 대해 이사회와 의회, 14일 이내에 승인 시 예산 채택/ 이사회와 의회, 합의되지 않는 경우 집행위는 새로운 예산 초안을 제출(새해 초에도 연간 예산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임시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1/12 규모의 예산을 매월 할당)

   (EU 이사회, EU budget timing (pragmatic calendar),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budget-timeline/, 검색일자: 2025. 2. 25.)

3) EU는 5년마다 EU의 우선순위와 목표 달성 방법을 포함하는 전략적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EU 장기 예산인 다년도 재정 체계에 반영함.
   2024~2029년 전략적 의제는 2024년 6월 27일 EU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으로 세 가지 우선순위 '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럽', '강하고 안전한 유럽', '번영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을 2024~2029년 전략적 의제로 설정함.
   참고로 이전 기간인 2019-2024년 전략적 의제는 시민과 자유 보호, 강하고 활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 기후 중립적· 친환경적이며 공정하고 모두를 위한 유럽 건설, 세계무대에 유럽의 이익과 가치 전파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함(EU, "European Union priorities 2019-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european-council/strategic-agenda-2024-2029, 검색일자: 2025. 2. 20.)

4) Regional Emergency Support to Reconstruction(RESTORE) 프로그램은 EU 차원에서 EU 회원국에 재난 및 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EU 집행위, "Regional Emergency Support to Reconstruction – amending regulation proposal," 2024. 10. 16.,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information-sources/publications/legislation/2024/regional-emergency-support-to-reconstruction-amending-regulation-proposal_en, 검색일자: 2025. 2. 27.)

과 같이 EU 차원의 프로그램 이행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

◆ EU 이사회, 헝가리 재정 지출 경로 승인(2025. 2. 18.)[5]

● 헝가리는 재정 지출 경로로 2025~2028년 평균 순지출 증가율을 4.0%로 설정하였고, 이사회는 이행 약속 및 투자 계획에 대해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고 평가함

– (거시경제 가정) 잠재 GDP 성장률은 2024년 1.4%, 2025년 1.5%, 2028년 1.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GDP 디플레이터 성장률은 2024년 7.2%, 2025년 4.1%로 감소한 후 2028년 3.4%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 지출 경로) 명목 순지출 증가율을 2025년 4.3%, 2026년 4.0%, 2027년 3.9%, 2028년 3.7%로 설정[6]

▸ (이행 시 재정 전망) 약속한 순지출 경로를 따르고 가정이 실현될 경우 헝가리 일반정부 채무는 2024년 GDP 대비 74.0%에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68.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GDP 대비 4.9%에서 2026년 2.5%, 2028년에는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정책금리) 2월 5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를 각각 0.25%p 하향 조정[7]

표 1 **헝가리 재정 지출 경로(순지출 증가율) 이행 약속 및 이행 시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5-2028년 평균 증가율	2038년
순지출 명목 증가율(%)	–	4.6	4.3	4.0	3.9	3.7	4.0	–
순지출 증가율 누적 (2023년 대비 총 증가율)(%)	–	4.6	9.1	13.5	17.9	22.2	–	–
잠재 GDP 성장률(%)	–	1.4	1.5	1.7	1.7	1.6	1.6	–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	–	7.2	4.1	3.5	3.4	3.4	3.6	–
순지출 경로 이행 시 재정 예상								
일반정부 채무(GDP 대비 %)	73.4	74.0	73.5	71.3	69.9	68.2	–	54.5
일반정부 재정수지(GDP 대비 %)	-6.7	-4.9	-3.6	-2.5	-2.0	-1.5	–	-2.2

출처 EU 이사회,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Hungary," 2025. 2. 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894-2025-INIT/en/pdf, Table 3 & Table 4, 검색일자: 2025. 2. 19.

5)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Council sets fiscal expenditure path for Hungary and adopts recommendation to correct its excessive deficit situation," 2025. 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2/18/council-sets-fiscal-expenditure-path-for-hungary-and-adopts-recommendation-to-correct-its-excessive-deficit-situation/, 검색일자: 2025. 2. 19.
__, "Council recommendation endorsing the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 of Hungary," 2025. 2. 7.,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894-2025-INIT/en/pdf, 검색일자: 2025. 2. 19.

6) EU 회원국이 순지출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재정준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U 집행위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평가함. 재정 완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는 이사회에 초과적자시정절차를 개시할 것을 제안하고, 초과적자시정절차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와 미준수 시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됨

7)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5. 1. 30.,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5/html/ecb.mp250130~530b29e622.en.html, 검색일자: 2025. 2. 21.
___, "Monetary policy statement Press conference," 2025. 1. 3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_conference/monetary-policy-statement/shared/pdf/ecb.ds250130~1ac86112bf.en.pdf, 검색일자: 2025. 2. 21.

- 기준금리 3.15%→2.90%, 한계대출금리 3.40%→3.15%, 수신금리 3.00%→2.75%로 인하[8]
  - ▶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정책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하였음 (표 2 참고)
- (경제) EU 통계청 속보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2024년 4/4분기에 정체되었고,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9]
  - 서비스 부문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제조업은 부진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가계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가 지출로 이어질 만한 유인이 부족함
  - 지난 12월 실업률은 6.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시장은 견고한 상황임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4년 11월 2.2%에서 12월 2.4%로 상승하였고, 2025년 1월 2.5%로 전월 대비 0.1%p 증가[10]
- (평가) 경기는 세계 무역 갈등 및 경제 심리 위축 우려 등으로 여전히 하방 위험이 있음
  - 글로벌 무역 마찰[11]이 심화하면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경제가 약화되어 유로 지역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긴축 통화정책[12]의 시차효과(lagged effects)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이 더욱 둔화될 수 있음

표 2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12월	2월
기준금리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	3.15	2.90
한계대출금리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3.40	3.15
기준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0.25	-0.25
수신금리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3.00	2.75
변동폭(%p)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2. 21.

8)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2. 21.)

9) 지난 2024년 12월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경제 회복이 느릴 것으로 예상(2024년 0.7%, 2025년 1.1%, 2026년 1.4%, 2027년 1.3%)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2. 1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212~2acab6e51e.en.html, 검색일자: 2025. 2. 24.)

10) 유럽중앙은행, "Inflation and consumer prices," https://www.ecb.europa.eu/stats/macroeconomic_and_sectoral/hic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5. 2. 25.

11)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유럽의회, "EU-US trade: how tariffs could impact Europe," 2025. 2. 13., https://www.europarl.europa.eu/topics/en/article/20250210STO26801/eu-us-trade-how-tariffs-could-impact-europe, 검색일자: 2025. 2. 26.)

12)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금리 인상 조치가 시작되었음

IMF

◆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13] 결과 발표 (2025. 2. 6.)[14] [15]

- (현황) 한국은 2023년의 급격한 경기 둔화 이후 경제성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도 감소함
  - 지난 협의[16] 이후, 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대체로 IMF가 제시한 이전 정책권고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표 4 참고)
- (전망)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0%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2%)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글로벌 공급망 긴장 완화, 국제 유가 하락, 긴축 통화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어 1.9%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2025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아웃풋 갭이 해소되면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에 반도체 수요의 회복 덕분에 크게 개선되어 GDP 대비 4.2%까지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반도체 포함 주요 수출품의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및 중간재 수입 확대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축소되어 GDP 대비 3.6%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
- (위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
- (정책) IMF 집행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이 물가상승 억제와 금융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통화정책)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인 점을 환영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함
  - (재정정책) 2025년 예산에서 계획된 재정 건전화 조치를 지지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야심찬 중기적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

▶ 연금 개혁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재정준칙 도

13)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간 점검 활동

14)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2025. 2. 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5/02/06/pr-2530-korea-imf-concludes-2024-art-iv-consultation-with-republic-of-korea, (검색일자: 2025. 2. 11.)

15)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2025. 2. 7., https://doi.org/10.5089/9798229000161.002, (검색일자: 2025. 2. 11.)

16) 2023년 11월에 발표

입, 세수 확충 및 지출 구조조정(특히 에너지보조금 축소),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경제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한해) 등의 개혁을 제언

- (금융 안정성 및 부동산시장 대응) 현재 금융 안정성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부동산시장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

▶ 당국은 주택시장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개선하는 조치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성장잠재력 제고) 한국의 노동력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를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면서, 청년층 소득 개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 포괄적 개혁을 권고

▶ 외환 및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

▶ 서비스 및 중소기업 부문의 배분 효율성을 개선하고, 노동 및 상품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을 제안

- (장기적 경제회복력 강화) 경제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혁신 촉진, 규제 간소화, 수출 및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권고

▶ AI 도입에 대비한 정책 마련과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일관된 기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 (향후 일정) IMF 협정 제4조에 의거한 다음 연례협의 보고서는 2026년 초에 발표 예정

표 3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GDP증가율(연평균)	2.7	1.4	2.2	2.0
실업률	2.9	2.7	2.7	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연평균)	5.1	3.6	2.3	2.0
종합재정수지(Overall balance, GDP 대비 %)	-2.8	-1.5	-1.5	-1.2
일반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debt, GDP 대비 %)	49.8	51.5	52.8	54.1
경상수지(GDP 대비 %)	1.4	1.9	4.2	3.6
쿼터(Quota, in millions of SDRs)	8,582.70			

주 1. 2024, 2025년은 예측치
2. 종합재정수지는 순융자/순차입에서 정책융자(policy lending)을 제함
3. 쿼터는 2025년 1월 6일 기준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5. 2. 5.

표 4 IMF 권고사항 이행 현황

구분	IMF 권고사항	정책 실행 조치
통화정책	–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시행	– 한국은행은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히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재정정책	– 긴축적 재정 기조를 유지	– 정부는 2024년 상당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 합리화를 추진한 일부 징후가 나타남
	– 국내 에너지 가격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조정	– 국내 에너지 가격은 2023년에 상승한 후, 2024년에 다시 동결됨
주거 및 금융정책	– 금융지원 조치는 일시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유지해야 함	– 금융지원 조치는 목표지향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시적 조치는 만료됨
	– 주거정책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면서도 질서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신속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켰으며, 정책의 초점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전환됨
	–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완충장치, 규제, 감독 및 위험 관리가 필요함	– 대손충당금 확대, 금융 감독 강화, 취약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계부채 및 비금융기업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민간 부문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구조적 정책	– 재정정책을 잘 설계된 규칙 기반 체계(well-designed rule-based framework)에 고정해야 함	– 2022년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이 여전히 논의 중
	– 세수 확보 및 지출 합리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	– 정부는 중기적으로 지출 합리화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상 중
	– 연금개혁 추진(기여율 인상,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 고려)	– 새로운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었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 여성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여 성별 격차를 축소	–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구조개혁 진전이 어렵지만, 당국은 근무시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노동시장 이중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서비스를 포함한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 규제 혁신 및 현장 장애 요인 해결이 이루어짐
	–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 개혁, 부문별 인센티브 도입, 석탄세 확대 등을 통해 기후정책 강화	– 정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1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추가 기후 정책을 수립할 예정

출처 IMF, *Republic of Korea: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Annex I , p. 47, 2025. 2. 5.

OECD

◆ OECD, 2024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5. 2. 11)[17]

• OECD 회원국의 2024년 3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반면,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

– 2024년 3분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함

17) OECD, "Growth in real household income remains subdued in third quarter of 2024," 2025. 2. 11.,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2/growth-and-economic-well-being-thir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5. 2. 13.

* 데이터가 제공된 19개국 중 12개국은 증가, 6개국은 감소, 1개국은 변동 없음

▶ 캐나다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1.1%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임

▶ 독일은 전분기의 감소세에서 반등하여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0.9%, 실질 GDP가 0.1% 증가했으며, 특히 부동산 소득의 증가가 영향을 미침

▶ 프랑스는 주로 근로소득 증가에 힘입어 실질가계소득이 0.7% 증가하며 5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1인당 실질 GDP도 0.3% 증가

▶ 이탈리아와 미국의 실질가계소득은 각각 0.4%, 0.1%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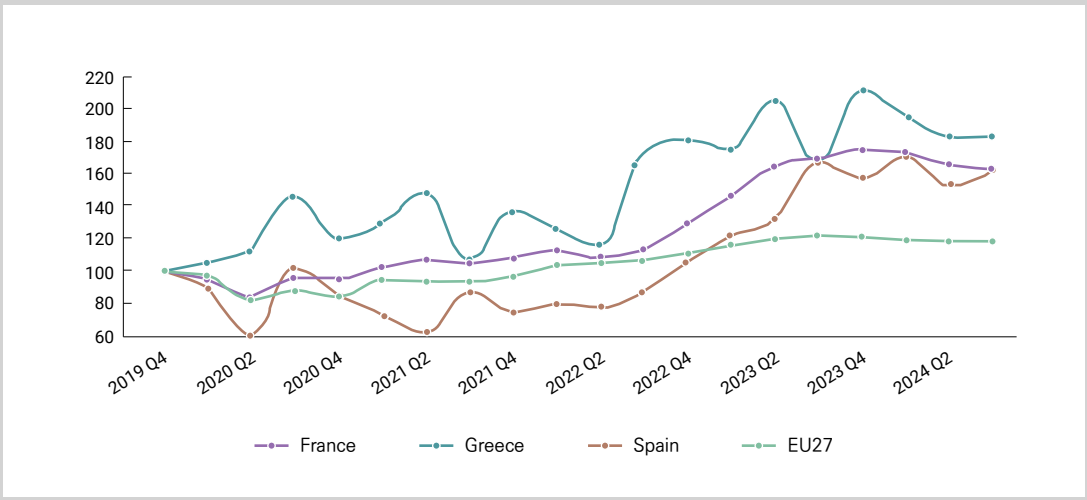
▶ 영국은 세금이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0.1% 감소했으며, 1인당 실질 GDP 역시 0.2% 감소

– 기타 OECD 회원국 중 스페인은 부동산 소득의 큰 증가에 기인하여 실질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상승(2.2%)한 반면, 덴마크는 주로 부동산 및 자영업 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가장 큰 하락 폭(-1.8%)을 기록

▶ 스페인의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부동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분기 6.6%에서 2024년 3분기에 10.4%로 증가함

▶ 부동산 소득 비중 증가 현상은 스페인 외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와 프랑스는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가처분소득에서 부동산 소득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그림 1 참고)

그림 1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동산소득 비중(2019년 4분기~2024년 3분기)**



주 계절조정 데이터, Q4 2019 = 100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Figure2, p. 2, 2025. 2. 11.

표 5 분기별 1인당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1.1	0.7	1.1	0.7	0.0	0.5	1.2	0.2	0.2
G7	1.0	0.2	1.1	0.3	0.2	0.3	1.2	0.2	0.3
캐나다	-0.6	0.8	-1.9	0.4	0.5	-0.6	0.2	0.7	1.1
프랑스	1.5	1.1	-1.0	-0.3	0.3	1.0	0.3	0.5	0.7
독일	0.9	-0.8	-1.1	1.3	-0.1	-0.1	0.9	-0.4	0.9
이탈리아	0.5	-3.1	1.6	0.2	0.7	-0.1	1.2	1.0	0.4
일본	0.4	-0.1	-0.8	..	..	..	..	..	..
영국	0.2	1.8	-0.9	1.1	-0.3	0.7	1.1	1.4	-0.1
미국	1.2	0.4	2.2	0.4	-0.1	0.5	1.1	0.0	0.1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Table1, p 3, 2025. 2. 11.

표 6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3	0.2	0.3	0.3	0.2	0.2	0.3	0.3	0.3
G7	0.3	0.3	0.4	0.3	0.3	0.2	0.1	0.3	0.4
캐나다	0.0	-1.0	0.3	-0.4	-1.0	-0.9	-0.2	-0.1	-0.4
프랑스	0.4	0.0	-0.2	0.6	0.1	0.4	0.0	0.2	0.3
독일	0.3	-0.6	-0.1	-0.2	0.1	-0.5	0.2	-0.4	0.1
이탈리아	0.6	-0.3	0.4	-0.2	0.2	-0.1	0.4	0.2	0.0
일본	-0.3	0.5	1.4	0.5	-0.9	0.3	-0.4	0.6	0.5
영국	-0.2	0.1	-0.1	-0.2	-0.4	-0.5	0.5	0.1	-0.2
미국	0.5	0.6	0.5	0.4	0.8	0.5	0.2	0.5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3rd quarter 2024," Table1, p 3, 2025. 2. 11.

◆ OECD,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5. 2. 20.)[18]

- 2024년 4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잠정)은 0.3%로 전분기 대비 0.2%p 둔화되었으며, G7 국가의 실질 GDP 성장률은 국가별로 엇갈린 성장세가 반영되어 전분기 대비 소폭(0.1%p) 둔화된 0.4%를 기록
  - 프랑스와 독일의 성장률은 각각 0.4%→-0.1%, 0.1%→-0.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가 위축된 모습을 보임

18) OECD, "OECD GDP growth slows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2025. 2. 20.,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5/02/gdp-growth-fourth-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5. 2. 24

▸ 프랑스의 성장 둔화는 지난 3분기 동안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견인했던 경제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4분기 상품 수입의 증가와 재고 축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독일의 경우 수출이 3분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이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미국의 성장률은 전분기 0.8%에서 0.6%로 둔화되었으며, 이는 투자 및 수출 감소에 기인함

–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3분기 이후 변동 없이 0.0%로 유지됨

– 반면 일본의 성장률은 0.4%에서 0.7%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상품 수입 감소에 따른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 덕분임

– 캐나다는 0.3%에서 0.4%로, 영국은 0.1%에서 0.2%로 각각 성장세가 소폭 상승

● 연간 추정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2024년 연간 GDP 성장률은 1.7%로 다소 둔화되었으며, 이는 2023년 성장률인 1.8%보다 낮은 수준임

– GDP 데이터가 제공된 28개 회원국 중 5개국은 2024년에 경제 위축을 겪었으며, 10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13개국은 성장세가 지속됨

표 7 **분기 실질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Q3	Q4	Q1	Q2	Q3
OECD	0.3	0.5	0.5	0.4	0.3	0.4	0.5	0.5	0.3
G20	0.5	1.0	0.9	0.8	0.6	0.8	0.7	0.8	..
유럽연합 27개국	-0.2	0.1	0.0	0.1	0.1	0.3	0.2	0.4	0.1
유로지역 20개국	-0.1	0.0	0.1	0.0	0.0	0.3	0.2	0.4	0.0
G7	0.4	0.6	0.4	0.5	0.4	0.3	0.5	0.5	0.4
캐나다	-0.1	1.0	0.2	-0.1	0.2	0.5	0.5	0.3	0.4
프랑스	0.1	-0.1	0.7	0.2	0.5	0.1	0.3	0.4	-0.1
독일	-0.5	0.1	-0.2	02	-0.4	0.2	-0.3	0.1	-0.2
이탈리아	-0.2	0.4	-0.2	0.3	-0.1	0.4	0.2	0.0	0.0
일본	0.2	1.3	0.6	-0.9	-0.1	-0.5	0.7	0.4	0.7
영국	0.3	0.1	0.0	-0.1	-0.3	0.7	0.5	0.1	0.2
미국	0.8	0.7	0.6	1.1	0.8	0.4	0.7	0.8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는 데이터 없음

출처 OECD, "OECD GDP growth slows slightly in the fourth quarter of 2024," Table1, 2025. 2. 20.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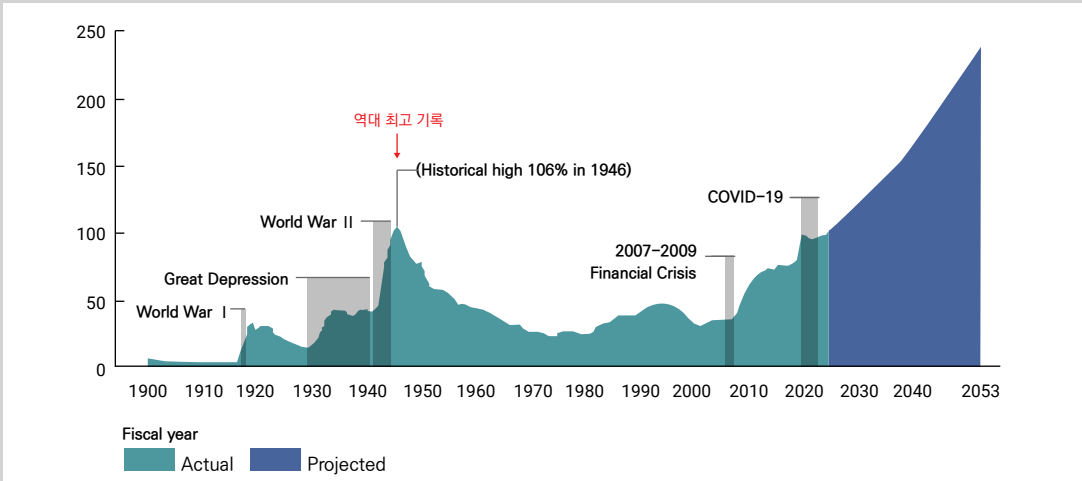
기타

◆ 감사원(GAO), 국가 재정건전성(The Nation's Fiscal Health) 보고서 발표(2025. 2. 5.)[19]

- (배경) GAO는 매해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회 정책 권고안 제시
  - 동 보고서의 전망은 CBO의 데이터와 현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20]
- (채무 현황 및 전망) 2024회계연도 말(2024. 9. 30.) 기준, 연방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28.2조달러(GDP 대비 98%)로 집계
  - GDP 대비 연방 채무는 2027회계연도에 역대 최고 수치인 106%, 204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그림 2 **미국 연방 채무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출처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 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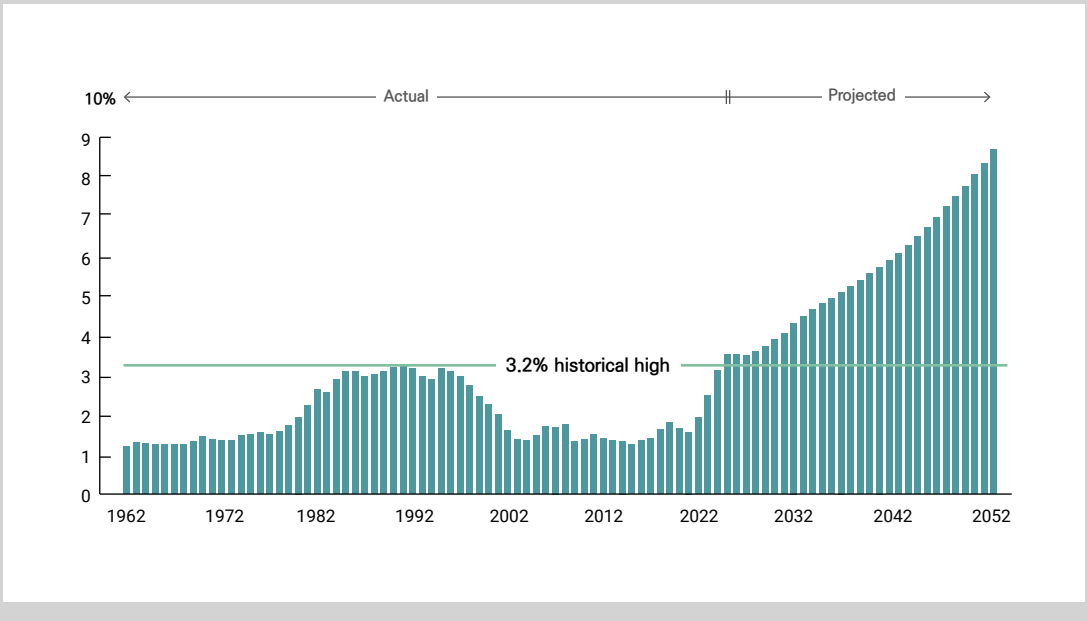
19)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https://www.gao.gov/products/gao-25-107714, 검색일자: 2025. 2. 21.

20) 동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발표한 의회예산처(CBO)의 예산 및 경제 전망 보고서(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6.18.)의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전망 분석 실시 → 첫 11년의 전망은 CBO의 2024~2034 전망 보고서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12년 전망부터는 주요 항목에 따라 다른 수치들을 적용(주요 기금 위원회의 장기 전망 수치(사회보장 지출, 메디케어 등), 과거 최근 30년 실적치 평균(수입 수치 및 재량지출 등), 또는 CBO의 30년 전망치(연방 보건 지출 등) 일부 등을 적용하여 분석함

- (재정적자 추이 및 전망)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강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8조달러로 집계(5년 연속 1조달러 초과)
  - 2024회계연도의 적자는 9,500억달러의 프로그램 지출과 8,820억달러의 순이자지출로 구성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장기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 대비 큰 메디케어, 기타 보건 지출, 사회보장지출 등에 크게 기인
- (순이자지출 현황 및 전망) 순이자지출 규모는 2017회계연도(2,630억달러) 이래 3배 이상 증가
  - 2024회계연도의 순이자지출 규모는 메디케어, 국방예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 상승할 것으로 나타남
- (GAO 권고) 채무 목표 도입, 기초 재정수지 평가, 주요 기금 고갈 대응, 재정 책임성 강화, 채무한도 대응 등 제시
  - (채무 목표 도입) 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과 목표(예. GDP 대비 채무 비율 목표) 도입
  - (기초 재정수지 평가) 기초 재정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의무지출, 재량지출, 수입 등) 평가
  - (주요 기금 고갈 대응) 사회보장연금 및 메디케어 기금이 각각 8년 및 11년 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고갈 대응책 마련
  - (재정 책임성 강화) ①부정(fraud), 낭비, 남용 및 부적절(improper) 지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②심각한(yawning) 조세 격차(tax gap) 문제 해결, ③비효율적인 조세 지출 축소 등을 추진하는 등 효율성을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
  - (채무 한도 대응) 현 채무 한도를 대체할 방안 마련

그림 3 **순이자지출 추이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회계연도)



출처 GAO, "The Nation's Fiscal Health: Strategy Needed as Debt Levels Accelerate," 2025. 2. 5.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회의에서 현 기준금리(4.25%~4.50%) 동결 결정(2025. 1. 29.)[21]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미국 경제는 견고하나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동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22]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은 불확실(uncertain)
- (물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 유지
- (노동시장) 노동시장 상황은 견고,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안정적
- (유동성 정책) 연준이 보유한 국채, 정부기관 채무, 정부보증기관의 모기지 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지속 축소(양적 긴축)할 것으로 결정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회의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2월)된 FOMC 회의 의사록(Minutes)[23]에서는 경제 전망의 예측 어려움과 금리 동결 결정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언급됨

- (경제 전망)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 변화의 범위, 시기,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에 따라 기준선 전망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강조됨
- (인플레이션) 2025년 인플레이션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2025년) 인플레이션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정책에 기인

◆ 트럼프 대통령, 공식 임기 시작 이후 다수의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등 정책 조치 이행(2025. 1. 23.~2. 25.)

● (주요 행정명령) 정부 구조조정 및 연방 관료 규모 축소,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추가 관세 부과, 불법 이민 대응, IT 분야 강화 등

표 8 미국 2025년 1월 FOMC 회의록 주요 항목 변화

(단위: 십억달러)

항목	FOMC: 2024년(12.17.~18.)		FOMC: 2025년(1.28.~29.)
경제성장	견고한 속도(solid pace)로 지속 확장, 전망은 불확실		동일
물가	다소 높은 수준	변화 →	"다소 높은 수준" 동일 "2% 목표 진전" 문구는 삭제
노동시장	2024년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		견고
- 실업률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 유지		최근 몇 개월 안정적
기타	추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동일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B-1, 각 년도.

21)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5. 1. 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50129a1.pdf, 검색일자: 2025. 2. 17.

22) Federal Reserve Reform Act of 1977은 Federal Reserve act of 1913을 개정한 법으로 1977년 법에서 연준의 dual mandate(최대 고용, 물가 안정)을 규정

23) 미국 연방준비제도,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5. 1. 28.~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minutes20250129.pdf, 검색일자: 2025. 2. 21.

- (정부 인력 최적화)[24] 정부 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부 효율위원회(DOGE*)[25]의 출범과 함께 기관별로 배치된 DOGE 팀장[26]과 협의하며, 각 기관장은 적용 가능한(applicable) 법률을 준수하여 대규모 구조조정을 신속히 준비(30일 이내에 기관에 통·폐합 관련 보고서 제출)

  *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 (연방 관료제 축소 개시)[27] 기관의 축소 또는 해체(14일 이내) 명령, 30일 이내 추가적인 불필요한 정부기관 및 연방 자문위원회를 식별하여 보고서 제출
- (중국·멕시코·캐나다[28]에 추가 관세 부과) 각 국가별로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판

▶ (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29]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10% 추가 관세 부과

▶ (멕시코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후 유예)[30] 멕시코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2025. 2. 1.)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멕시코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조치가 있었기에 해당 관세 조치는 유예(2025. 2. 3.)되어 3월 4일 재개

▶ (캐나다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후 유예)[31] [32] 25% 추가 관세 부과(2025. 2. 1.)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캐나다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조치가 있었기에 해당 관세 조치는 유예(2025. 2. 3.)되어 3월 4일 재개

- (불법 이민 지원 자금 종식)[33] 불법 이민을 유인하는 국민 세금의 사용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혜택 금지[34]
- (구리 수입으로 인한 안보 위협 대응)[35] 무역 확장

---

24) 백악관,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Workforce Optimization Initiative – Executive Order," 2025. 2.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lementing-the-presidents-department-of-government-efficiency-workforce-optimization-initiative/, 검색일자: 2025. 2. 26.

25) 본 조직은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행정명령(EO 14158)을 근거로 출범하였으며, 연방기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대통령실 직속(USDS) 소관의 임시 조직으로 하며, 2026년 7월 4일까지 정부효율 의제 추진 후 종료(참고: USDS: United States DOGE Services → 기존 조직인 United States Digital Services를 개명)

26) 기관별로 배치된 DOGE 팀은 대통령 행정명령(EO 14158)을 근거로 최소 4명의 인력(팀장, 엔지니어, 인사담당자, 법률 전문가)으로 구성

27) 백악관, "COMMENCING THE REDUCTION OF THE FEDERAL BUREAUCRACY," 2025. 2.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commencing-the-reduction-of-the-federal-bureaucracy/, 검색일자: 2025. 2. 26.

28)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추가 관세 부과 후 유예 조치 실시

29)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Executive Order,"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자: 2025. 2. 24.

30)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ituation at Our Sou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2. 24.

31) 백악관,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 Executive Order," 2025. 2.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검색일자: 2025. 2. 24.

32) 백악관, "Progress on the Situation at Our Northern Border," 2025. 2.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progress-on-the-situation-at-our-northern-border/, 검색일자: 2025. 2. 25.

33) 백악관, "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 Executive Order," 2025. 2. 1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nding-taxpayer-subsidization-of-open-borders/, 검색일자: 2025. 2. 26.

34) 동 행정명령은 1996년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 P.L. 104-193)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대부분의 납세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

35) 백악관,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2025. 2. 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dressing-the-threat-to-nationalsecurity-from-imports-of-copper/, 검색일자: 2025. 2. 26.

법*[36]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여 국가 안보에 미치는 구리 수입의 영향 평가 보고

* (무역 확장법 제232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가능

-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추진단[37] 출범)[38] 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목표 하에 디지털 자산 및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NEC) 산하에 실무 추진단 출범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39] 개인의 성과보다 집단 정체성을 우선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희생시키며 획일성을 강요하는 현 이념적 교조(ideological dogma) 체계를 비판하면서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십 유지 전략 담당
- (기타) 특정 UN 기구 탈퇴/자금 지원 중단/모든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 검토,[40] 국제형사재판소(ICC)[41] 관련 재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4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따라 강제 전역된 군인들의 재입대 허용,[43][44] 반유대주의 정서 대응,[45] 종이 빨대 조달 및 강제 사용 중단[46]

● (주요 메모랜덤) 미국 투자, 낭비 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우선주의 투자 정책)[47] 투자 촉진을 위해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10억달러 초과 투자 자금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 신속 처리 등
- (낭비 지출 검토)[48] 각 기관의 수장은 폐지된 모든 프로그램, 취소된 계약, 종료된 보조금 및 기타 중

36) Trade Expansion Act of 1962

37) Digital Asset Markets working group

38) 백악관,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 Executive Order," 2025. 1. 2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digital-financial-technology/, 검색일자: 2025. 2. 24.

39) 백악관,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25. 1. 2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esidents-council-of-advisors-on-science-and-technology/, 검색일자: 2025. 2. 24.

40) 백악관,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AND ENDING FUNDING TO CERTAIN UNITED NATIONS ORGANIZATIONS AND REVIEWING UNITED STATES SUPPORT TO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xecutive Order," 2025. 2. 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withdrawing-the-united-states-from-and-ending-funding-to-certain-united-nations-organizations-and-reviewing-united-states-support-to-all-international-organizations/, 검색일자: 2025. 2. 25.

41)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42) 백악관, "IMPOSING SANCTIONS O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Executive Order," 2025. 2.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sanctions-on-the-international-criminal-court/, 검색일자: 2025. 2. 26.

43) 재입대한 군인들이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하며 급여 전액 지급, 복지, 보너스 지급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4) 백악관, "REINSTATING SERVICE MEMBERS DISCHARGED UNDER THE MILITARY'S COVID-19 VACCINATION MANDATE – Executive Order," 2025. 1. 2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reinstating-service-members-discharged-under-the-militarys-covid-19-vaccination-mandate/, 검색일자: 2025. 2. 24.

45) 백악관, "Additional Measures to Combat Anti-Semitism – Executive Order, 2025. 1. 2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dditional-measures-to-combat-anti-semitism/, 검색일자: 2025. 2. 24.

46) 백악관, "ENDING PROCUREMENT AND FORCED USE OF PAPER STRAWS– Executive Order," 2025. 2. 1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nding-procurement-and-forced-use-of-paper-straws/, 검색일자: 2025. 2. 26.

47) 백악관,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Memorandum, 2025. 2. 2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merica-first-investment-policy/, 검색일자: 2025. 2. 24.

48) 백악관, "Radical Transparency About Wasteful Spending," 2025. 2. 1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radical-transparency-about-wasteful-spending/, 검색일자: 2025. 2. 25.

단된 연방 자금 집행 내역의 세부 정보 공개

- (규제 완화)[49] 신규 규제 도입 시 최소 10건을 폐지 원칙 도입

• (주요 대통령 포고령; proclamation)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한 추가 관세 3월 12일부터 시행

- (알루미늄 관세)[50] 알루미늄에 대해 10% → 25% 상승한 수입 관세(알루미늄 파생(derivative aluminum) 제품 등으로 확대 포함) 부과
- (철강 관세)[51] 철강 수입 관세 25%(철강 파생(derivative steel) 제품 등으로 확대 포함) 부과

일본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2025. 1. 24.)[52]

• 일본은행은 1월 23~24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융시장 조절방침을 변경

- (금융시장 조절방침)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53]를 약 0.5%로 유지되도록 운용

▸ 이번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작년 7월 31일에 변경된 방침에 따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0.25%로 유지되도록 운용해왔으며, 1월 23일 기준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는 평균 0.227%[54]

▸ (기타 제도 적용 이율 변경) 상기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보완 당좌예금제도, 기준 대출이자율을 변경

▸ (보완 당좌예금제도[55] 적용이율) 보완 당좌예금제도의 적용이율을 기존 0.25%에서 0.5%로 인상 결정

▸ (기준 대출 이율)[56] 보완 대출제도[57]의 적용금리인 기준

49) 백악관,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2025. 1. 3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unleashing-prosperity-through-deregulation/, 검색일자: 2025. 2. 26.

50)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2025. 2. 1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aluminum-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2. 25.

51)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2025. 2. 1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united-states/, 검색일자: 2025. 2. 25.

52)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について」, 2025. 1. 24.,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5/k250124a.pdf, 검색일자: 2025. 2. 3.

53)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無担保コールレート(オーバーナイト物))는 콜시장에서 계약일에 자금을 수령 및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자금 대출 및 차입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2.htm, 검색일자: 2024. 3. 26.

54) 일본은행, 「コール市場関連統計(毎営業日)」, https://www3.boj.or.jp/market/jp/menu_m.htm, 검색일자: 2024. 3. 28.

55) 일본은행이 받아들이는 당좌 예금 중 소요준비를 초과하는 '초과준비' 금액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제도.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oth_a/index.htm, 검색일자: 2024. 8. 23.

56) 일본은행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관한 기준이 되는 대출 이율'. 출처: 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laws.e-gov.go.jp/law/409AC0000000089#Mp-Ch_2, 검색일자: 2024. 8. 26.

57) 일본은행이 금융기관 등의 차입 신청을 받아 이미 차입된 담보 범위 내에서 기준 대출 이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대출.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한으로 함.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mopo/measures/mkt_ope/len_a/index.htm, 검색일자: 2024. 8. 26.

대출 이율을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

- (대출 증가 지원 자금 공급)[58] 예정대로 2025년 6월말로 신규 대출을 종료하며,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종료하는 관점에서의 경과조치로서 7월 이후 2025년 내에는 만기 도래액의 절반을 상한으로 하여 대출기간 1년의 차환을 인정하기로 함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5. 1. 27.)[59]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60]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0.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1.1%, 1.0%를 나타낼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2.7%를 나타낼 것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2.4%, 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10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변화가 없으며, 미국 물가 상승, 최근의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2024~2025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상향 조정

표 9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2024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4~0.6〈0.5〉**	**2.6~2.8〈2.7〉**
	2024년 10월 전망	0.5~0.7〈0.6〉	2.4~2.5〈2.5〉
2025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9~1.1〈1.1〉**	**2.2~2.6〈2.4〉**
	2024년 10월 전망	1.0~1.2〈1.1〉	1.7~2.1〈1.9〉
2026회계연도	**2025년 1월 전망**	**0.8~1.0〈1.0〉**	**1.8~2.1〈2.0〉**
	2024년 10월 전망	0.8~1.1〈1.0〉	1.8~2.0〈1.9〉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출처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2025年 1月)」, 2025. 1. 27., p. 9, 일부 발췌

58)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행동과 기업 및 가계의 긍정적인 자금수요 증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대출 잔액을 늘린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가액의 2배 상당액까지 장기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에 도입이 결정.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0.htm, 검색일자: 2024. 3. 26.

59)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2025年 1月)」, 2025. 1. 27.,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501b.pdf, 검색일자: 2025. 2. 3.

60)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상반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58%. 출처: 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5. 1. 8.,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5. 2. 14.

◆ 일본 내각부, 「2024회계연도 일본 경제 보고서」 발표 (2025. 02. 12.)[61]

- (개요) 일본 내각부에서는 매년 '일본 경제' 시리즈를 공표하여 일본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4년 일본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소비 회복,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과제와 기업의 도산 및 창업 관련 현황 및 과제를 분석
- (일본 경제 동향) 2024 일본경제는 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가계 부문의 실질 소득이 증가로 전환하는 등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 미국 등 해외 동향에 유의할 필요
-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개인소비의 회복) 일본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과 이를 상회하는 임금 상승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도산 및 창업 동향) 수입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업종 간의 자금조달 편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격전가의 원활화, 노동력 절감 및 디지털 투자 촉진 등 지원이 중요

◆ 일본 내각부, 2024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5. 2. 17.)[62]

- (4분기) 전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연율 2.8%)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1.3%(연율 5.1%)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1%p로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7%p로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하여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백색가전, 숙박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0.1%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과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각각 0.1%, 0.5%를 나타냄
    -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2%p로, 2024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 전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의료비 등의 증가에 의해 0.3% 증가하여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전분기 대비 공적고정자본형성은 −0.3%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석유제품, 연구개발서비스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의약품, 전자 부품 등 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2.1% 감소
- (연간)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0.1%, 명목 GDP 성장률은 2.9%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0.2%p, 외수 −0.1%p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에 대한 내외수요 기여도는 내수 2.5%p, 외수 0.4%p를 나타냄

61) 일본 내각부, 「2024年度 日本経済レポート―賃金と価格をシグナルとした経済のダイナミズムの復活へ― 」, 2025. 2. 12., https://www5.cao.go.jp/keizai3/2024/0212nk/pdf/n24_5.pdf, 검색일자: 2025. 2. 18.

62)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ＧＤＰ速報(1次速報値)」, 2025. 2. 17.,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5. 2. 17.

표 10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1]
	Q4	Q1	Q2	Q3	Q4	
실질 GDP	-0.1	-0.5	0.7	0.4	0.7	2.8
국내수요	0.0	-0.2	1.0	0.5	-0.1	-0.2
민간수요	0.2	-0.2	0.8	0.7	-0.1	-0.4
민간최종소비지출	-0.1	-0.5	0.7	0.7	0.1	0.5
민간주택	-1.2	-2.8	1.4	0.5	0.1	0.4
민간기업설비	1.9	-0.4	1.1	-0.1	0.5	1.9
민간재고변동	(-0.1)	(0.3)	(-0.0)	(0.2)	(-0.2)	-
공적수요	-0.3	-0.3	1.8	-0.1	0.1	0.2
정부최종소비지출	-0.0	0.2	0.9	0.1	0.3	1.1
공적고정자본형성	-1.8	-2.0	5.7	-1.1	-0.3	-1.3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2]	(-0.1)	(-0.3)	(-0.3)	(-0.1)	(0.7)	-
재화·서비스 수출	2.8	-4.1	1.7	1.5	1.1	4.3
재화·서비스 수입	3.1	-2.8	3.0	2.0	-2.1	-8.0
명목 GDP	0.3	-0.1	2.1	0.7	1.3	5.1
GDP 디플레이터	0.3	0.4	1.4	0.3	0.6	-

주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표 11 일본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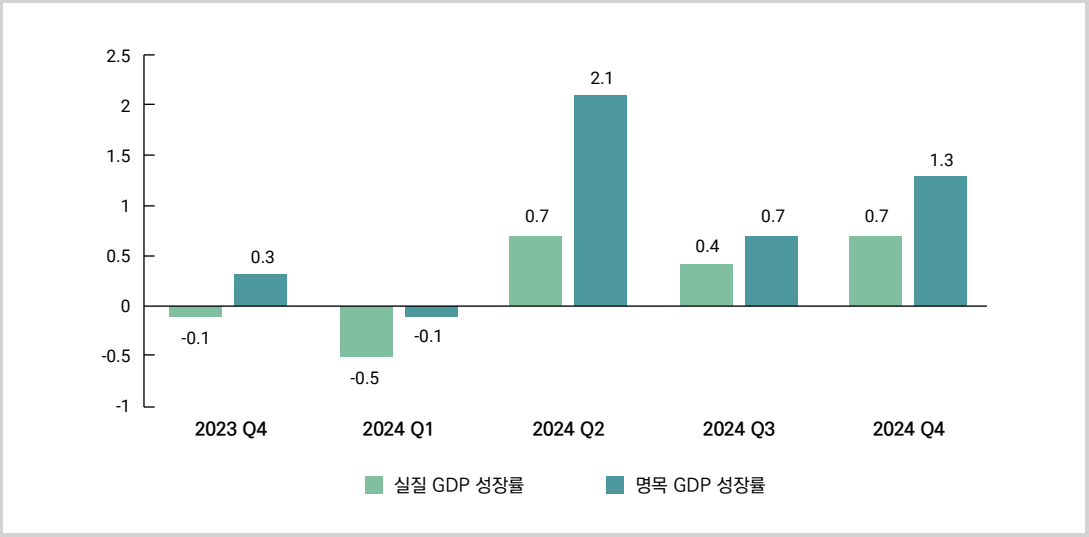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질 GDP	0.9	1.5	0.1
국내수요	1.5	0.5	0.2
민간수요	2.2	0.6	0.0
민간최종소비지출	2.1	0.8	-0.1
민간주택	-2.7	1.5	-2.3
민간기업설비	2.6	1.5	1.2
민간재고변동	(0.2)	(-0.3)	(-0.0)
공적수요	-0.6	0.1	0.5
정부최종소비지출	1.4	-0.3	0.9
공적고정자본형성	-8.3	1.5	-0.9
공적재고변동	(0.0)	(0.0)	(-0.0)
재화·서비스 순수출[1]	(-0.5)	(1.0)	(-0.1)
재화·서비스 수출	5.5	3.0	1.0
재화·서비스 수입	8.3	-1.5	1.3
명목 GDP	1.3	5.6	2.9
GDP 디플레이터	0.4	4.1	2.9

주 1)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5 표 3-1 및 p. 16 표 3-2 재구성.

그림 4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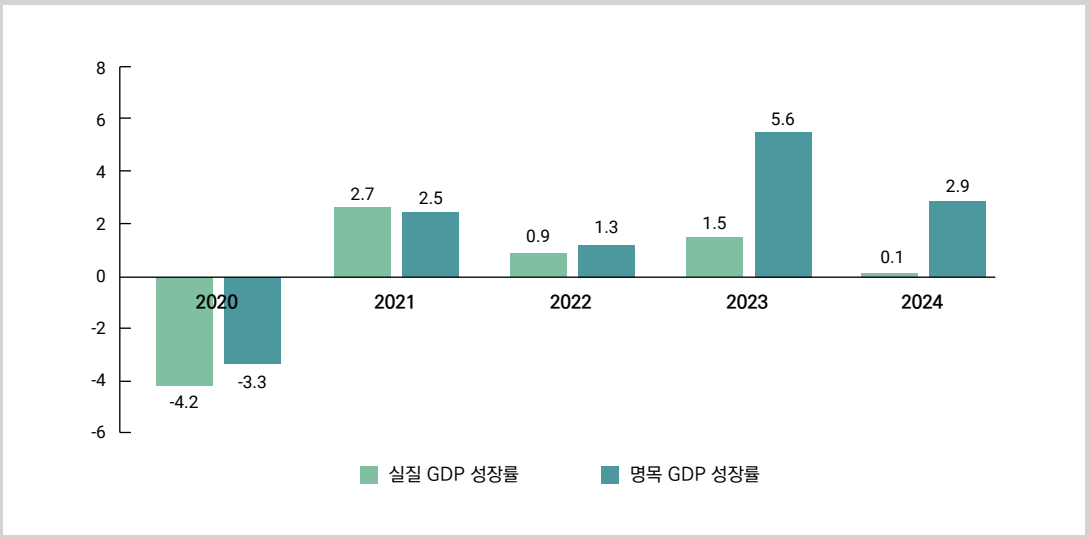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5 일본의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5 표 3-1 및 p. 16 표 3-2를 참고하여 작성

독일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5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5)'[63] 발표(2025. 1. 29.)[64]

- (경제 전망) 2025년 독일의 가격조정 GDP는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실질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물가)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2%, 2026년에는 1.9%로 감소할 전망
  - (고용) 취업자 수는 2024년 4,610만명을 기록한 후,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6.3%로 전망
  - (투자) 독일 연방군의 특수자금 투자의 영향으로 2025년 설비투자는 1.1%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0.6% 감소할 전망
- (재정 전망) 2024년 연방예산은 부채규정 기준 한도[65]내에서 운영되었으며, 새로운 2025년 예산안은 현재 임시예산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연방총선[66] 이후 재무부에서 최종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할 예정
  -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 만료로 2024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5%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63.25%로 전년(2023년 62.9%) 대비 소폭 상승
  - 투자지출은 2023년 총지출의 12%에서 2025년 16.6%까지 증가할 전망

표 12 **2023~2025년 독일 주요 경제수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GDP(가격조정)	-0.3	-0.2	0.3
취업자수(Erwerbstätige)	0.7	0.2	0.0
실업률(Arbeitslosenquote)	5.7	6.0	6.3
소비자물가지수(Inflationsrate)	5.9	2.2	2.2

출처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bericht 2025 der Bundesregierung," 2025. 1. 30., p. 21 Übersicht 1

63) 연간경제보고서는 매년 1월에 발표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 전망을 제시함

64)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5:Für eine neue wirtschaftliche Dynamik," 2025. 1. 2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5/20250129-jahreswirtschaftsbericht-2025.html, 검색일자: 2025. 2. 10.
독일 연방정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5:Leichter Zuwachs der Wirtschaftsleistung," 2025. 1. 2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jahreswirtschaftsbericht-2025-2332708, 검색일자: 2025. 2. 10.

65)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66) 관련 내용은 본문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연방총선 결과 발표(2025. 2. 24.)」를 참고

- 순차입은 2024년 390억유로에서 2025년 513억 유로로 증가

● (주요 정책) 2024년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67]에서 2025년 새로운 경제적 역동성을 목표로 전환하고 다음 10가지 주요 정책을 언급

- (더 나은 여건 조성 및 공공투자 강화) 독일의 경제 및 기후 중립 전환을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는 인프라(철도 노선 개보수)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 (규제 완화 및 경쟁 완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고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과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
- (노동인센티브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 인구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저하는 미래 노동시장에 큰 도전 과제이므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시간제 근무의 개선을 위해 부모의 취업 기회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조치 시행
- (디지털화 기회의 효과적 활용) 정부는 디지털화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와 규제를 개선해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둠
- (경쟁력 강화 및 스타트업 지원 확대) 독일은 WIN-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시장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EU 자본시장 통합을 추진
-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비용 절감)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탈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기후중립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디지털화 법률을 통한 전력 생산과 소비 효율화를 추진
- (산업 경쟁력 및 현대화 추진) 수소, 배터리 셀 생산, 마이크로 전자 및 통신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생태계, 클라우드 기술, 양자 기술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에도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투자
- (무역 다변화 및 회복력 강화) EU 단일 시장의 심화와 국경 간 투자 및 혁신 촉진을 위해 법적 집행력 강화 및 규제 간소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68]를 통해 탄소 배출의 해외 이전 방지 등 글로벌 기후보호 추진
- (주택공급 및 저소득 가구 지원) 대도시에서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 및 사회 주택 건설 지원,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건물 건설 지원금 제공, 주거수당 인상 등을 시행
- (교통 인프라 현대화 및 이동성 강화) 철도, 도로, 수로 등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대중교통의 법적 지원 강화, 전기차 및 충전소, 재생가능한 연료 개발 및 혁신 등을 지원

67)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2월 재정동향」, 2024.를 참고

68)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과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관세의 일종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4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 (2025. 2. 18.)[69]

● 독일의 2024년 4분기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약 4,610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0.0% 증가

– 계절조정 없는 2024년 4분기 취업자 수는 약 4,630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0.3%(156,000명) 증가하였으며, 매년 4분기 취업자 수 증가는 반복적 현상이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증가율을 하회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취업자 수는 8,000명(0.0%) 감소하면서 사실상 정체된 수준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각각 0.5%, 0.6% 증가

◆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연방총선 결과 발표(2025. 2. 24.)[70]

●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를 발표

– 연방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82.5%였으며, 득표율은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28.6%, 독일대안당(AfD) 20.8%, 사회민주당(SPD) 16.8% 순으로 높음

▶ 이에 따라,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사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5. 2. 25.)[71]

● 2024년 4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

– 전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정부 소비 및 민간 소비는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서비스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

▶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에서 특히, 서비스 수입은 4.2% 급증하고 상품 수출은 전분기 대비 3.4%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기 장비의 수출 감소에 기인

표 13 독일 고용 증가율

(단위: 만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취업자수*	4,551	4,564	4,572	4,583	4,594	4,601	4,603	4,607	4,610	4,611	4,606	4,606
직전분기 대비*	0.4	0.63	2.2	0.2	0.2	0.2	0.0	0.1	0.1	0.0	-0.1	0.0
전년 동기 대비	1.6	1.6	1.2	1.1	0.9	0.8	0.7	0.5	0.4	0.2	0.1	0.0

주 * 계절조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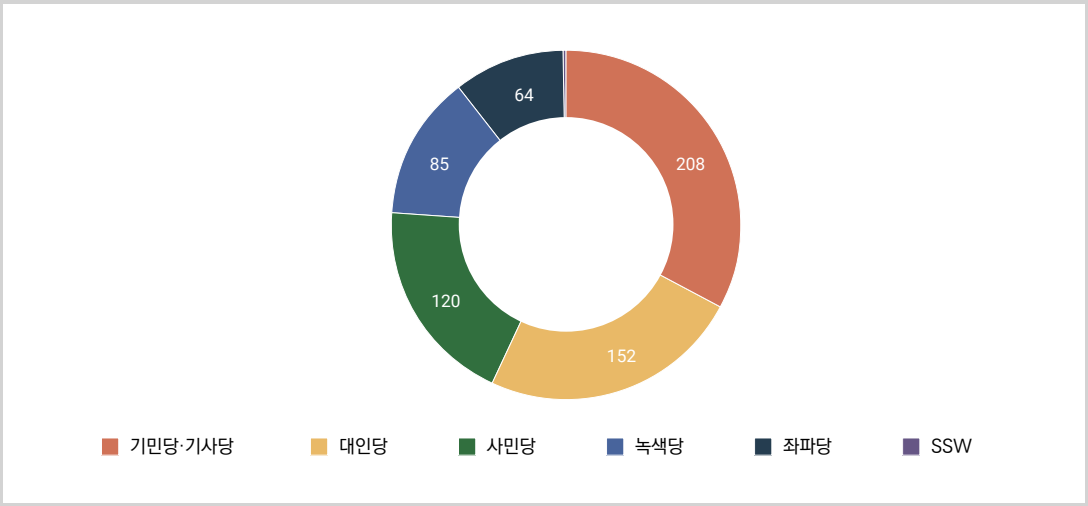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e: Deutschland, Quartale, Inlands-/Inländerkonzept, Original- und bereinigte Daten,"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13321/table/13321-0002, 검색일자: 2025. 2. 20.

69) 독일 연방 통계청, "Erwerbstätigkeit im 4. Quartal 2024 stagniert," 2025. 2. 1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2_13321.html, 검색일자: 2025. 2. 20.

70)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Vorläufiges Ergebnis der Bundestagswahl 2025 steht fest," 2025. 2. 24., https://www.bundeswahlleiterin.de/info/presse/mitteilungen/bundestagswahl-2025/27_25_vorlaeufiges-ergebnis.html, 검색일자: 2025. 2. 24.

71)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4.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 검색일자: 2025. 2. 26.

그림 6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따른 정당별 의석 수



출처 독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Ergebnisse," https://www.bundeswahlleiterin.de/bundestagswahlen/2025/ergebnisse/bund-99.html, 검색일자: 2025. 2. 25.

- 전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총부가가치(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 2024년 4분기에는 EU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독일의 성장률은 주요 회원국인 프랑스(-0.1%), 이탈리아(0.0%), 스페인(+0.8%)보다 더 낮은 수준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4분기 독일의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4%,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72] 성장률은 -0.2%를 기록

- 투자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 소비는 증가
- 2024년 4분기 독일의 취업자 수는 4,630만명으로 전년 동기 수준으로 거의 유지되었으나,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가격 조정 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5. 2. 25.)[73]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50억유로 증가한 1,188억유로(잠정치)로 GDP의 약 2.8% 수준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305억유로로 축소되었음에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72)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73) 독일 연방통계청, "Staatsdefizit erhöht sich im Jahr 2024 auf 118,8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70_813.html, 검색일자: 2025. 2. 26.

표 14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유로, %)

구분	원계열				가격 조정(X-13 활용)		
	경상가격 기준		가격 조정, 연쇄가격 기준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달력효과 조정
	10억유로	%[1]	2020=100	%[1]	2020=100	%[2]	%[1][3]
2023(연간)	4,185.55	5.9	104.81	-0.3	104.84	-0.1	-0.1
2024(연간)	4,305.26	2.9	104.56	-0.2	104.63	-0.2	-0.2
2023 1분기	1,034.14	7.3	105.72	0.6	104.96	0.1	0.2
2023 2분기	1,024.06	5.9	102.98	-0.4	104.80	-0.2	0.0
2023 3분기	1,048.71	5.4	104.96	-0.7	105.00	0.2	-0.3
2023 4분기	1,078.64	5.0	105.57	-0.4	104.61	-0.4	-0.2
2024 1분기	1,064.83	3.0	104.90	-0.8	104.86	0.2	-0.1
2024 2분기	1,060.79	3.6	103.12	0.1	104.55	-0.3	-0.3
2024 3분기	1,078.22	2.8	105.10	0.1	104.66	0.1	-0.3
2024 4분기	1,101.42	2.1	105.14	-0.4	104.45	-0.2	-0.2

출처 1) 전년도 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
2) 전년도 또는 직전분기 대비 변화
3) 연도별 GDP 성장률은 달력효과 조정값과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값이 동일(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제외)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4.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5. 2. 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2/PD25_069_811.html, 검색일자: 2025. 2. 26.

사회보장 각 부문에서 동시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2009년 이래로 처음

- (수입) 2024년 일반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조 129억유로이며, 처음으로 2조유로를 경신
  -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수입은 2.4%, 소득세 수입은 3.6% 증가
- (지출) 2024년 일반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조 1,316억유로를 기록
  - 2024년 이자비용은 전년보다 24.2% 증가하고, 사회적 현물지원도 7.0% 증가

표 15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잠정치)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반정부 순융자(+)·순차입(-)	-116.4	-84.9	-103.8	-118.8
일반정부 수입	1,747.9	1,852.6	1,921.2	2,012.9
일반정부 지출	1,864.3	1,937.5	2,025.0	2,131.6

주 1.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2. 재정통계 범위 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years," https://www-genesis.destatis.de/datenbank/online/statistic/81000/table/81000-0031, 검색일자: 2025. 2. 26.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의회, 2025년도 예산법안(PLF 2025)(2025.2.5.)[74]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2025)(2025.2.12)[75]을 헌법 제49조3항*에 따라 채택

*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 (배경) 2025년도 예산법안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하여 하원 의결을 생략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어, 상원으로 이송 및 통과[76] [77]
  - 2024년 12월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78]되어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이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신규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2025년 1월 국회에서 심사가 재개
  -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2월 3일에 예산법안, 2월 10일에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에 대해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한 이후, 법안별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이틀 뒤 부결
- (주요 내용) 채택된 예산안은 양원 공동협의회(commission mixte paritaire)가 합의한 공동결의안에 기준하여, 2025년에 500억유로의 예산 절감 및 GDP 대비 5.4%의 재정적자를 목표로 하고 사회보장 지출은 6,660억유로에 상응할 예정
  - (예산법안) 정부안 편성 시 600억유로의 예산 절감을 지출 부문 400억유로 및 세입 부문 200억유로로 나누어 목표하였으나, 최종 채택된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절감은 500억유로 규모로 축소하고, 지출 부문 300억유로 감축 및 세입 부문 200억유로 유지하여 시행 예정[79]

---

74)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 adoption du texte CMP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art. 49.3 C)," 2025. 2. 5.,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rojet-de-loi-de-finances-pour-2025-adoption-du-texte-cmp-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art.-49.3-c, 검색일자: 2024. 2. 11.

75)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3e partie & ensemble) :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art. 49.3 C)," 2025. 2. 1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5-3e-partie-ensemble-rejet-d-une-motion-de-censure-art.-49.3-c, 검색일자:2025. 2. 25.

76)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2025. 2. 17.,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jlf2025.html, 검색일자:2025. 2. 25.

77)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17., https://www.senat.fr/dossier-legislatif/plfss2025.html, 검색일자: 2025. 2. 25.

78)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의 내각 불신임안과 사퇴 관련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2월호 재정동향, 「KIPF 재정동향」, 2024. 12. 31., p. 3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50

79)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Déclaration de M. Éric Lombard,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sur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5, au Sénat le 6 février 2025," 2025. 2. 6.,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97239-eric-lombard-06022025, 검색일자: 2025. 2. 20.

- (사회보장법안) 2025년 사회보장 지출은 6,660억 유로이며, 사회보장부문의 재정적자는 221억유로로 정부안에서 예상한 160억유로 대비 상승[80]

● (최고재정자문위원회의 의견)[81] 정부의 경제 성장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이나, 2025년 재정적자 목표는 합리적인 추정치로 평가

- 재정적자 목표는 낙관적인 거시경제 가정, 지방정부 지출의 현저한 둔화, 건강보험 지출의 엄격한 통제를 가정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엄격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함

기타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역대 중기재정법안(LPFP)[82] 평가 보고서 발표(2025. 1. 22.)[83]

● (개요) 역대 5개의 중기재정법안 중 특이점이 있거나 평가가 불가능한 2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공공채무 목표수준 이탈 원인에 대해 거시경제요인을 중점으로 분석

* 제정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2009-2012 중기재정법안과 2023년 말 채택되어 현재 시행중이라 평가 불가능한 2023-2027 중기재정법안을 제외

- 보고서의 분석 대상이 되는 중기재정법안은 총 3개로, ①2012-2017 중기재정법안, ②2014-2019 중기재정법안, ③2023-2027 중기재정법안 등이 해당

● (주요내용) 계획과 달리 공공채무 목표 비율은 빈번히 초과되어 달성 실패하였으며, 주요 이탈 원인으로 과거 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저조 및 이자지출 제외 재정지출(dépense publique primair)[84] 부문에서 계획 대비 초과 지출이 제시됨

- (경제성장률) 평균적으로 명목 GDP 규모의 경우 2014-2019 중기재정법안 기간은 과거 전망에 부합하였으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기간에 대해 과대평가됨

- (재정지출) GDP 대비 재정지출의 목표 비율은 중기재정계획 제정 시 과소하게 설정되었으며, 이는 낮은 경제성장률에 주로 기인하나 물가 상승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정부지출의 구매력을 유지했기에 정책적 노력 또한 부재하다고 평가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예산집행결과 발표(2025. 2. 4.)[85]

● (재정수지) 2024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563억 유로로 2023년 1,733억유로 대비 170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4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434억유로로 2023년 4,546억유로 대비 112억유로 감소

80)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5," 2025. 2. 21., https://www.vie-publique.fr/loi/295695-plfss-2025-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5. 2. 25.

81)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à l'amendement des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5," 2025. 1. 29., https://www.hcfp.fr/sites/default/files/2025-02/Avis%20PLF_PFSS_2025_amend%C3%A9s.pdf, 검색일자: 2025. 2. 14.

82)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83) 최고재정자문위원회, "Pourquoi les objectifs de ratio de dette publique fixés dans les lois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n'ont-ils pas été atteints ?," 2025. 1. 22., https://www.hcfp.fr/sites/default/files/2025-01/Note%20d%27%C3%A9tude%20n%C2%B02025-1.pdf, 검색일자: 2025. 2. 20.

84) 보고서는 세액공제 지출은 제외하고 재정지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유는 2010년 국가계정 회계기준 변경 중 세액공제 관련한 변동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밝힘

85)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dgfip/SME/sme_2024-12_provisoire.pdf?v=1738676608, 검색일자: 2025. 2. 12.

- 지출 감소세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철폐 및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한 물가 연동 채권[86] 상환 비용 감소 등에 기인

• (재정수입) 2024년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3,489억유로로 2023년 3,480억유로에 비해 소폭 증가

- 기타 국내 세금(autres taxes intérieures) 부문에서 전년 대비 약 20억유로 규모로 증가

◆ 프랑스 회계감사원, 공공재정의 현황 보고서 발표 (2025. 2. 13.)[87]

• (개요) 재정 부문별로 분석하여 2024년 재정적자의 원인 파악 및 2025년 이후 재정 목표 달성의 위험요소를 명시

• (주요 내용) 보고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전망 대비 2024년의 재정적자 악화와 2025년 재정 목표 완화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그 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 재정적자) 세입의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증가세 둔화, 지출의 경우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 부문에서 전망을 초과한 지출 발생으로 2024년 재정수지 악화

▶ (적자 상쇄 항목) 에너지소비세(TICFE) 인하 혜택 종료가 세입 상승에 기여하였고, 물가상승률 둔화로 인한 물가 연동 채권 상환 비용 감소가 재정수지 악화를 상쇄

- (2025년 재정 목표) 2025년 목표가 이미 완화되었고,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 낙관과 세수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

▶ (재정 목표 완화) 2025년 예산 정부안과 중기재정계획(MTSP)[88]에서 재정적자를 5.0%로 전년 대비 1.1%p 개선을 목표하였으나, 2025년 2월 채택된 예산법에서는 5.4%로 제정

▶ (경제 전망) 2023년 12월 제정된 중기재정법안(LPFP)에서 잠재성장률을 연 1.35%로 전망하였으나, 2024년 들어 프랑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

* 하향 조정은 외부(지정학적 긴장,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및 내부(예산안 제정 관련 정치 교착상태, 세금 인상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활동 여건의 악화에 기인

표 16 프랑스 2024년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율(%)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58,195	-168,159	-153,946	-
재정지출(Dépenses)	512,935	522,693	511,146	-2.2%
재정수입(Recettes)	354,740	345,534	357,200	0.8%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6,726	-5,101	-2,350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51,469	-173,260	-156,296	-

출처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décembre 2024," 2025. 2. 4.

86) 프랑스 정부 물가 연동 국채(OATi)와 유로존 물가 연동 채권(OAT€i) 등

87)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ébut 2025," 2025. 2. 13., https://www.ccomptes.fr/fr/publications/la-situation-des-finances-publiques-debut-2025, 검색일자: 2025. 2. 17.

88) 중기재정계획은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에 따라 각 회원국에 적합한 재정·개혁·투자 목표를 4개년 단위로 통합하여 작성된 재정 계획을 일컬음

▶ (세수의 불확실성) 2025년 재정법 채택의 지연으로 과세 중 일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세법의 소급 금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 등

표 17 프랑스 2024년 재정수지의 전망치 편차 분석

(단위: GDP 대비 %)

발생 요인	전망 간 편차	
	2023 예산법	2024 예산법
기존 전망치	**-4.5**	**-4.4**
2023년 재정적자 영향	-	-0.7
경제 상황	-0.1	-0.3
증세	+0.2	+0.2
재정지출(예외조치[1] 제외)	-0.9	-0.1
부채비용	-0.1	+0.1
중앙정부	0.0	+0.1
지방정부	-0.3	-0.2
사회보장제도	-0.5	-0.1
예외조치[1] 종료	+0.7	-0.1
낮은 수준의 GDP에 대한 조세의 탄력성	-0.4	-0.5
최신 전망치	**-6.0**	**-6.0**

주 1) 예외조치란 팬데믹과 고물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경기 부양성 지출

출처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 "La situation des finances publiques début 2025," p. 16, 2025. 2. 13.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발표(2025. 2. 11.)[89]

● (개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세출예산안[90]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매년 2월에 발표

– 이는 촉박하고 긴급한 추가 지출이 요구되어 통상적인 세출예산 과정을 기다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 추가경정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과 구분

● (주요 내용) 2024-25회계연도 중앙정부 추가경정

89) HM Treasury, "Supplementary Estimates 2024-25," Corporate report, 2025. 2.17.,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24-25, 검색일자: 2025. 2. 12.

90)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법률로 지출 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보통 5월에 발표(2024년에는 7월 4일 조기총선 이후인 7월 17일에 발표)

예산안의 총지출은 현재 계획 대비 약 840억파운드 증가한 1조 227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한도(DEL)[91]는 5,438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92]은 4,789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각각 429억파운드, 374억파운드 증액
- 총 비예산 지출[93]은 1,008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38억파운드 증액
- 총 순현금 소요액[94]은 8,544억파운드로 현재 계획 대비 40억파운드 증액

▶ 국방부(+90억파운드), 보건·사회복지부(+68억파운드), 스코틀랜드 사무소·법무장관실[95](+25억파운드), 교육부(+21억파운드) 등에서 증액

▶ 재무부(-23억파운드), 기업·통상부(-20억파운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14억파운드) 등에서 감액

기타

◆ 영국 노동·연금부, 생활비 보조금(Cost of Living Payment) 평가보고서 발표(2025. 1. 27.)[96]

● (배경) 2021년과 2022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생활비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

-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2022년 10월 11.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2023-24회계연도 기준, 보조금 대상자는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97] 수급자, 장애급여 수급자, 동계 연료 보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로, 각각 900파운드(1차 301파운드, 2차 300파운드, 3차 299파운드), 150파운드, 300파운드를 지급[98]

표 18 **2024-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4-25 현재 계획(a)	2024-25 조정 규모(b)	2024-25 수정 계획(a + 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500,906	42,867	543,773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441,522	37,360	478,882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942,428**	**80,227**	**1,022,656**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97,020	3,774	100,794
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1,039,448**	**84,001**	**1,123,449**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89,001	-80,033	-269,034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850,447**	**3,969**	**854,416**

출처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4-25 – Supplementary Estimates*, 2025. 2. 11., p. 4, Table 1

91)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92)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93)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출

94)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발생주의 기준의 총 지출을 현금주의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95) Scotland Office and Office of the Advocate General: 스코틀랜드와 영국 정부의 중간 역할을 하며, 정책·법률·재정 측면에서 스코틀랜드의 이익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기관

9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ost of Living Payments Evaluation," Research and analysis, 2025. 1. 2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payments-evaluation, 검색일자: 2025. 2. 3.

97) 통합급여, 소득 기반 구직급여, 소득 기반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 등의

98) 총 재정규모는 112억파운드로 추계

● (개요) 2023-24회계연도 동안 시행된 생활비 보조금 정책의 운영 효과와 영향을 평가

– 양적 설문조사(quantitative surveys)와 수급자 대상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를 병행하여 실시

● (주요 결과) ①생활비 상승 경험, ②보조금 지급 인식도, ③보조금의 사용, ④보조금의 체감적인 영향 측면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대다수의 보조금 수급자는 생활비 중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에너지 및 공공요금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응답

▶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급자는 지출을 줄이거나 신용카드 사용 증가, 대출 신규 또는 증액, 지인으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

▶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 건강 관련 지출이 있는 가구, 채무 상환 부담이 있는 가구는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

②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게 나타남

▶ 보조금 대상 중 연금 수급자의 64%는 사전에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복지급여 수급자의 47%, 연금 수급자의 32%만이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임을 인지

▶ 보조금 지급 후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92%, 연금 수급자의 95%, 장애급여 수급자의 77%가 보조금 수령을 인식

③ 대부분의 보조금 수급자는 에너지 및 공공요금,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등, 지출이 더 어려워진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

▶ 일부는 보조금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보다 일상적인 생활비로 소진했다고 응답하였고,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수급자의 상당수는 보조금을 수령한 후 한 달 이내에 사용하였고, 여러 번 나누어 지급받기보다 일괄 지급을 선호

④ 보조금은 수급자의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필수 지출 항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고 평가

▶ 수급자들은 보조금이 에너지 및 공공요금 납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 상당수는 보조금 덕분에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응답

▶ 재정 회복력 및 개인 웰빙 향상, 급여 계좌로의 자동입금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4.75% → 4.50%) 결정(2025. 2. 6.)[99]

● (경제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국제 경제 및 영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0.5%로 추정되며, 2025년 상반기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6%에서 2025년 1분기 0.5%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 재정, 이민 정책의 규모와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

▶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에서 2025

99)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4.5% – February 2025," News & Events, 2025. 2. 6.,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5/february-2025, 검색일자: 2025. 2. 13.;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5," 2025. 2. 6.

년 1분기 0.2%로 증가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화 정책 완화로 인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9~10월에 발표된 통화·재정 부양책의 영향으로 인해 2024년 4분기 1.6%로 증가하였고, 2025년 1분기에는 1.1%로 전망

▶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신규 관세 도입과 중국의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s)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영국 경제) 영국 GDP 성장률은 2024년 4분기 -0.1%, 2025년 1분기 0.1%로 전망

▶ (수요·공급) 최근 수요가 둔화되었으나 공급 능력이 이미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휴 경제력[100]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2024년 12월에 2.5%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년 3분기에는 3.7%까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전분기 대비 고용 증가율은 약 0.2%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나, 연말부터 최근까지는 0.1%로 둔화되었고, 실업률은 2024년 초반 이후 4.1%에서 4.4% 범위에서 유지

● **(통화정책위원회 결정)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7명이 4.50%로, 2명이 4.25%로 금리 인하를 지지**

표 19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4년								2025년
	2.1	3.21	5.9	6.20	8.1	9.19	11.7	12.19	2.6
금리	5.25	5.25	5.25	5.25	5.00	5.00	4.75	4.75	4.5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5. 2. 17.

호주

◆ **호주 연방정부 및 퀸즐랜드 정부, 북부 퀸즐랜드의 대규모 홍수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복구 패키지 발표 (2025. 2. 6., 2. 10., 2. 13.)[101]**

● (배경) 북부 퀸즐랜드의 타운즈빌과 주변 도시에

100) 산업생산능력이나 주택, 고용 등이 얼마나 사용되지 않고 유휴(slack) 상태로 남아있는지를 표현하는 개념

101) 호주 총리실, "Flood recovery package delivers $8 million kick start for North Queensland clean-up," 2025. 2. 6., https://www.pm.gov.au/media/flood-recovery-package-delivers-8-million-kick-start-north-queensland-clean, 검색일자: 2025. 2. 12.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North Queensland flood recovery gets $8 million injection," 2025. 2. 6., https://www.qra.qld.gov.au/news-case-studies/news/north-queensland-flood-recovery-gets-8-million-injection, 검색일자: 2025. 2. 12.
___, "Personal Hardship Assistance for more north Queenslanders," 2025. 2. 10., https://www.qra.qld.gov.au/news-case-studies/news/personal-hardship-assistance-more-north-queenslanders, 검색일자: 2025. 2. 13.
호주 총리실, "Disaster assistance grants available for flooded North Queensland primary producers, small businesses and not for profit organisations," 2025. 2. 13., https://www.pm.gov.au/media/disaster-assistance-grants-available-flooded-north-queensland, 검색일자: 2025. 2. 17.

서는 지난 1월 3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

- (복구 지원 상황) 주요 패키지 자금은 연방-주 재난 복구 기금 약정(Commonwealth-State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102]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 긴급지원금, 생산자 및 기업지원 등 재난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1차 패키지(2025.2.6.): 북부 퀸즐랜드 홍수 피해 지역사회의 긴급 복구를 우선 지원하고,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개인 긴급지원금 및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800만호주달러 투입
  - 2차 패키지(2025.2.13.): 홍수 피해를 입은 1차 생산자,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에 1억호주달러 이상의 특별 보조금 지급

◆ 호주 중앙은행(RBA), 2025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인하(4.35%→4.10%) 발표(2025. 2. 18.)[103]

*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2025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및 2026년 경제성장률은 2.4%, 2.3%로 전망
  - 경제가 균형을 회복하면서 가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염두에 둘 필요
  - ▶ 호주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북미 지역은 관세 조정 여파로 2026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중국은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 이상의 추가 재정 자극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상향 조정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4.2% 수준에서 안정화 전망
  - 2024년 후반 경제활동의 침체로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요를 지지해 향후 몇 년 동안 4.2%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할 전망
- (물가) 2025년 기조물가상승률이 2~3% 목표 범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가 현재 경로를 따른다면 예측 기간 동안 기조물가상승률이 2.5%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의 일부는 일시적 생계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2025년 말 관련 지원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말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2.8% 전망
- (금리) 중앙은행 이사회는 2025년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에서 4.10%로 25bp 인하 결정
  - 이사회는 제한적 통화정책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며, 물가상승에 대한 상방 위험은 완화되고 예상보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일찍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

---

102) 2018년 11월1일 시작된 주-연방 재해 복구 기금 약정(State-Commonwealth Disaster Recovery Funding Arrangements)은 이전의 Natur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s를 대체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자금으로 지역사회가 재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

103)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5," 2025. 2. 18.,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feb/,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5/feb/pdf/statement-on-monetary-policy-2025-02.pdf, 검색일자: 2025. 2. 20.

104) 출처: 호주 재무장관 홈페이지, "Reserve Bank cuts cash," 2025. 2. 18.,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reserve-bank-cuts-cash-rate, 검색일자: 2025. 2. 21.

–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보도자료[104]에서 이번 금리 인하에 따른 모기지 비용 감소는 미래 실질 가처분 소득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며, 현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비 관련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강조

표 20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2027년 6월
GDP 성장률	1.1	2.0	2.4	2.3	2.3	2.2
(11월 전망)	(1.5)	(2.3)	(2.3)	(2.3)	(2.2)	(n/a)
실업률	4.0	4.2	4.2	4.2	4.2	4.2
(11월 전망)	(4.3)	(4.4)	(4.5)	(4.5)	(4.5)	(n/a)
소비지물가상승률	2.4	2.4	3.7	3.2	2.8	2.7
(11월 전망)	(2.6)	(2.5)	(3.7)	(3.1)	(2.5)	(n/a)

주 전망은 2월 12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말 3.6%, 2026년 말 3.5%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출처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5," p. 5, Table 발췌, 2025. 2. 18.

중국

◆ 중국 정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절차 개시 등 다각적 대응(2025. 2. 4.)[105) 106) 107) 108) 109)]

• (WTO 제소)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WTO에 미국과의 분쟁 협의 요청

–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10%의 추가 관세와 무관세 최소허용 기준(de minimis) 폐지 관련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 대우 및 관세 의무와 상충된다는 입장

•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4일 일

105) 중국 제일재경(第一财经), 「加征关税, 诉至WTO并实施出口管制，中方多管齐下反制美对华加征关税」, 2025. 2. 4., https://www.yicai.com/news/102459716.html, 검색일자: 2025. 2. 24.

106) (WTO 제소) WTO, "China initiates WTO dispute complaint regarding US tariff measures," 2024. 2. 5.,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5_e/ds633rfc_05feb25_e.htm, 검색일자: 2025. 2. 24.

107)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商务部 海关总署公告2025年第10号公布对钨、碲、铋、钼、铌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的决定」, 2025. 2. 24.,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e623090907fc4e1092f0a4db72f57b95.html, 검색일자: 2025. 2. 18.

108) (수출 통제 등) 중국 상무부(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关于将美国PVH集团和因美纳公司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 2025. 2. 24.,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ab15d2258dda4e93b8ad1ec4776d37c3.html, 검색일자: 2025. 2. 24.

109) (추가 관세 부과) 중국 재정부(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2025. 2. 4., https://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2502/t20250204_3955222.htm, 검색일자: 2025. 2. 24.

부 희귀 금속 제품 및 그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미국 패션브랜드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

- 수출 통제 대상은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25개 품목

● (추가 관세 부과)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는 2025년 2월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 미국이 원산지인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에 15%,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 트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
- 추가 관세는 현행 적용 관세율에 기초하여 부과하며, 보세,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은 유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예산 50억위안 배정 (2025. 2. 14.)[110]

● (예산액)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중앙정부 예산 50억위안[111]을 배정하여, 전국 1,008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실행 지원

- 2024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50억위안, 농촌진흥보조금(鄕村振興補助資金)[112]에서 40억 5천만위안[113]이 선급 배정되어, 2025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총 140억 5천만위안[114] 배정

● (목적 및 대상) 건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 목표이며, 프로젝트 대상 지역의 생활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산업 발전 인프라 조건을 향상

- 저소득층 중 특히 농촌 지역의 빈곤 탈피 대상자나 재빈곤 방지 모니터링 대상자, 재해로 구호가 필요한 자, 빈곤 탈피 목적 이주자들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시켜 소득 증진 유도

▶ 12만 3천명의 농촌 주민과 저소득층을 토목공사에 참여시켜, 17억 1천만위안[115] 이상의 노동 보수 지불 계획

- 도로 건설, 농경지 개량, 배수로 및 소규모 제방 건설 등 인력 고용이 많고 기술 장벽이 낮으며, 기계 작업이 적은 소규모 농촌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점 지원
- 832개의 저소득 현 및 기타 저개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며, 국가 농촌진흥중점 현, 이주에 대한 후속 지원 과제가 많은 지역, 자연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집중 투자 예정

---

11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展改革委下达以工代赈中央投资50亿元 将吸纳12.3万低收入群众就近就业增收」, 2025. 2. 14., https://www.ndrc.gov.cn/fggz/dqzx/tpgjypkfq/202502/t20250214_1396120.html, 검색일자: 2025. 2. 18.

111) 약 9,877억 5천만원 (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1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농촌진흥보조금 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농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발전개혁위원회(广西壮族自治区 发展和改革委员会), 「2025年中央财政衔接推进乡村振兴补助资金1593亿元提前下达」, 2024. 12. 30., http://fgw.gxzf.gov.cn/fzgggz/xbzx/t19462765.shtml#:~:text=%E8%BF%91%E6%97%A5%EF%BC%8C%E8%B4%A2%E6%94%BF%E9%83%A8%E6%8F%90%E5%89%8D%E4%B8%8B%E8%BE%BE,%E8%A7%84%E6%A8%A1%E5%85%B1%E8%AE%A11593%E4%BA%BF%E5%85%83%E3%80%82, 검색일자: 2025. 2. 24.)

113) 약 98억 7,750만원 (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114) 약 2조 7,755억원 (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115) 약 3,378억 1,050만원 (1위안=197.55원(2025. 2. 26.) 기준)

스웨덴

예산·결산 등

◆ 스웨덴 재무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5. 1. 30.)[116]

- 재무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비"에 할당된 예산을 총 62억크로나 감액하는 내용을 제안[117]
- 스웨덴의 외교 및 안보의 정책적 이익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118]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기타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 금리 2.25%로 0.25%p 인하(2025. 1. 29.)[119]

- (배경)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위험이 제한적임에 따라 중앙은행에서는

표 21 지출분야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응"의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천크로나)

지출 분야/항목	결정된 예산 한도	예산 증감	새로운 예산 한도
6. 국방 및 사회 위기 대비	169,680,344	-6,186,200	163,494,144
1:1 군 조직 활동 및 대비 태세	66,245,663	+731,000	66,976,663
1:2 해외에서의 국방군 활동	2,799,759	+2,432,500	5,232,359
1:3 군사 장비 및 장비 도입	59,558,574	+954,600	60,513,471
1:9 국방 연구소	572,134	+89,500	661,634
1:14 우크라이나 지원	22 740 000	-10,479,900	12,260,100
2:1 해안 감시	1,890,822	+24,000	1,914,822
2:4 위기 대비	2,391,608	+52,000	2,443,608
2:8 심리 방위청	156,248	+10,000	166,248
변경 예산 합계		-6,186,200	

주 스웨덴의 예산은 국가 전체의 예산 총액한도를 설정한 이후 이를 27개의 지출분야(utgiftsområde)로 배분하고 이후 세부적인 지출항목(anslag)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출분야(utgiftsområde)는 총 27개로 1~27번으로 표시하며, 지출항목(anslag)은 1:1번과 같은 형태로 분류.

출처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Regeringens proposition 2024/25:94)," 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0dc216a486f54fda8935deddfacf9d02/extra-andringsbudget-for-2025—stod-till-ukraina_.pdf, 검색일자: 2025. 2. 17.

116) 스웨덴 재무부, "Extra ändringsbudget för 2025 – Stöd till Ukraina," 2025. 1. 30., https://www.regeringen.se/rattsliga-dokument/proposition/2025/01/prop.-20242594, 검색일자: 2025. 2. 17.

117) 스웨덴 의회, "Extra ändringsbudget: Finansutskottet föreslår försvarsmateriel som stöd till Ukraina," 2025. 2. 18., https://www.riksdagen.se/sv/aktuellt/aktuelltnotiser/2025/feb/18/extra-andringsbudget-finansutskottet-foreslar_cms69044190-8b21-4cfc-87ee-d5effc3453ddsv/, 검색일자: 2025. 2. 24.

118) 스웨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매년 4월과 9월에 총 2번 제출할 수 있으나(의회법 제9장 6조 1항),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외의 시기에도 추가경정예산 제출이 가능(의회법 제9장 6조 2항)

119) 스웨덴 중앙은행,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25 procent," 2025. 1. 2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5/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25-procent/, 검색일자: 2025. 2. 17.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

- (정책금리) 8년 만에 금리를 인하[120]한 2024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여 현재까지 총 1.75%p 인하
- (전망) 스웨덴 경제회복과 환율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금리 변경 필요성을 신중히 평가할 예정

◆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주요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 착공 결정 발표(2025. 2. 11.)[121]

- 국가 교통 인프라 계획(2022-2033)에 따라 도로 및 철도 프로젝트의 착공을 결정
- 정부는 이번 인프라 투자가 경제 성장, 기후 전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 1,200억크로나 규모의 교통 인프라 예산을 향후 12년간 투입할 예정

표 22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2월
기준금리	3.00	3.50	3.75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2.25
변동폭(%p)	+0.50	+0.50	+0.25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0.25

출처 1. 2023년: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표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 2024년 이후: 스웨덴 중앙은행, "Sifferunderlag: Penningpolitisk uppdatering januari 2025," 2025. 1. 29., https://www.riksbank.se/globalassets/media/rapporter/ppr/siffferunderlag/svenska/2025/sifferunderlag-penningpolitisk-uppdatering-januari-2025.xlsx, 검색일자: 2025. 2. 21.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2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 5., p. 53

121)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Regeringen beslutar om byggstarter för viktiga projekt inom väg- och järnväg," 2025. 2. 1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2/regeringen-beslutar-om-byggstarter-for-viktiga-projekt-inom-vag—och-jarnvag/, 검색일자: 2025. 2. 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2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45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3월 17일 발행 | 제345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2 | 월간 | ISSN 1226-2269 03